



"해외의회 포커스"

21. 1. 1 ~ 22. 10. 4.

목차

※ 클릭 후 파란 글씨 클릭하면 해당 주제로 이동합니다.!

목차	1
들어가기 전에...	4
해외의회 포커스	6
해외의회 포커스 (제20호)	6
해외의회 포커스 (제21호)	30
해외의회 포커스 (제22호)	37
해외의회 포커스 (제23호)	43
해외의회 포커스 (제24호)	50
해외의회 포커스 (제25호)	53
해외의회 포커스 (제26호)	56
해외의회 포커스 (제27호)	56
해외의회 포커스 (제28호)	56
해외의회 포커스 (제29호)	56
해외의회 포커스 (제30호)	56
해외의회 포커스 (제31호)	56
해외의회 포커스 (제32호)	56
해외의회 포커스 (제33호)	56
해외의회 포커스 (제34호)	56
해외의회 포커스 (제35호)	56
해외의회 포커스 (제36호)	56
해외의회 포커스 (제37호)	57
해외의회 포커스 (제38호)	57
해외의회 포커스 (제39호)	57
해외의회 포커스 (제40호)	57
해외의회 포커스 (제41호)	57
해외의회 포커스 (제42호)	57
해외의회 포커스 (제43호)	57
해외의회 포커스 (제44호)	57
해외의회 포커스 (제45호)	57
해외의회 포커스 (제46호)	58

해외의회 포커스 (제47호)	58
해외의회 포커스 (제48호)	58
해외의회 포커스 (제49호)	58
해외의회 포커스 (제50호)	58
해외의회 포커스 (제51호)	58
해외의회 포커스 (제52호)	58
해외의회 포커스 (제53호)	58
해외의회 포커스 (제54호)	58
해외의회 포커스 (제55호)	58
해외의회 포커스 (제56호)	58
해외의회 포커스 (제57호)	58
해외의회 포커스 (제58호)	58
해외의회 포커스 (제59호)	58
해외의회 포커스 (제60호)	58
해외의회 포커스 (제61호)	58
해외의회 포커스 (제62호)	58
해외의회 포커스 (제63호)	58
해외의회 포커스 (제64호)	59
해외의회 포커스 (제65호)	59
해외의회 포커스 (제66호)	59
해외의회 포커스 (제67호)	59
해외의회 포커스 (제68호)	59
해외의회 포커스 (제69호)	59
해외의회 포커스 (제70호)	59
해외의회 포커스 (제71호)	59
해외의회 포커스 (제88호)	60

들어가기 전에...

※ 타 직렬이나 혹은 기타 다른 문서가 궁금하시다면

 "아카이브  " 참조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공공누리 관련 공지 또한 위 링크에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https://open.kakao.com/o/sSL8zGSd>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출처 :

<https://www.assembly.go.kr/portal/na/jwcmsArticle/jwcmsFocus.do?menuNo=600086>

저작권자 : 대한민국 국회

공공누리 3단계

해외의회 포커스

해외의회 포커스 (제20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21호)

주요내용 요약

미국

- 117대 의회 개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선출
 - 1. 3. 제117대 의회를 개원하여 하원의장으로 낸시 펠로시(민)의원을 재선출
-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 실시
 -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라파엘 워녹 후보와 존 오소프 후보가 당선 및 유력인 바, 민주당이 2석 획득 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것으로 전망
- 시위대 의사당 점거로 대선 결과 인증을 위한 양원 합동회의 중단
 - 미 의회는 양원 합동회의를 통해 대선 결과를 인증함으로써 당선 확정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트럼프 지지자 시위대의 난입으로 회의가 긴급중단 되었으며 워싱턴DC는 통행금지령 발령
- 트럼프 대통령, 조지아주 국무장관(선관위장 겸임)에게 대선결과 관련 압력 행사

중국

- 2021년부터 시행되는 중국 법률 주요내용
 - 신중국 수립 이래 최초로 법전으로 명명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을 비롯한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 등이 제·개정되어 1. 1.부터 시행

일본

- 긴급사태선언下 국회의원 회식 등 규제
 - 중·참의원 운영위원회에서 긴급사태선언下 국회의원 회식 등의 행동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로 합의
- 일본 정부, 도쿄도 등 수도권에 긴급사태 선언 예정
 -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도쿄(東京都), 가나가와(神奈川県), 사이타마(埼玉県), 지바(千葉県)의 1도(都)3현(縣) 대상으로 긴급사태 선언 예정

러시아

- 러시아-중국 정상외교 동향
 - 러중 정상통화(12. 28.)에 이어 주중러시아대사 인터뷰를 통해 푸틴 대통령의 방중 계획을 재확인하는 등 양국 관계 밀착 현상 지속 전망

기 타

-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 선박 억류
 - 1. 4. 한국 국적 선박(MT-한국계미호)이 이란혁명수비대에 의해 환경 오염과 공해문제를 이유로 이란 영해로 억류 조치
- EU-중국 포괄적투자협정(CAI) 원칙적 타결
 - 12. 30. EU와 중국은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투자협정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
- 영국,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개시
- 포르투갈, 2021년 상반기 EU이사회 순회의장국 담당
- 아프리카 FTA 공식 출범
 - 1. 1. 아프리카 55개국 중 에리트레아를 제외한 54개국이 참여하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공식 출범
- 아랍 4개국, 카타르와 외교관계 복원 합의

국제회의및 국제기구

- IPU, 지정학적그룹 의장국 대상 화상회의 개최 예정
- 유엔인권이사회, 형법상 낙태죄 개선을 위한 정부입법안 검토 의견 발표

< 들여다보기 >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 : 양회(兩會)

□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 양회

- 양회는 우리나라의 정기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최고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통칭하는 말로써 매년 3월 약 2주간 진행되는 정치행사
 - 중국은 이 양회를 통해 경제성장률 등 경제성장 목표 설정, 주요 법안의 심의 통과, 의료, 교육, 취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제시
- 지난해 말 폐막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금년도 양회는 정상적으로 3월에 개최한다고 밝힘. 이는 중국이 코로나19의 통제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임
 - 지난해 3월, 중국은 심각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년 3월에 개최되던 양회 개최 시기를 5월로 늦춘 바 있음

□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중국 헌법상 최고 권력기구

- 전인대는 省·市·自治區·인민해방군 및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총 35개 선거 단위)로부터 간접선거로 최대 3,500명의 대표가 선출되며 전인대는 1년에 한 번 개최
 - 전인대 폐회 기간 중에는 상무위원회에서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하며 통상 2개월마다 1회 회의 개최
 - 전인대 상무위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4명, 15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
- 전인대의 역할로는 헌법 개정, 헌법 집행 감독 및 법률 제개정, 국가 주석, 부주석, 국무원 총리 등 국가 주요 인사의 선임 및 파면, 국가 예산과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심의·비준 등

□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중국 최고 정책자문기구

- 정협은 중국공산당, 8개 민주당파(정당), 8개 사회단체와 56개 소수민족, 5대 종교 단체의 대표, 홍콩·마카오 특구 동포, 대만 동포 및 귀국 학교대표 등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되며, 정협 전국위원회는 1년에 한 번 개최
 - 전국위원회 폐회 중에는 정협 상무위원회에서 전체회의의 결의를 집행하고 전인대 또는 국무원에 제출할 결의안을 심의·채택
 - 정협 상무위는 주석 1명, 부주석 24명, 상무위원 290여명으로 구성
- 정협의 역할은 국가의 중대사에 대해 토론·협상을 하고 국무원, 전인대 등에 건의하는 '정치협상',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 및 독자적인 결의를 담당하는 '민주감독', 대외적으로 각국의 민간외교단체나 개인 또는 정부 인사들과 친선·협조 도모하는 '대외협력'이 있음

□ 2020년 양회의 주요 결정사항

- **홍콩보안법** :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국가 분열 및 테러리즘 활동 처벌, 국가안보 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홍콩보안법」 제정 결정(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 수호의 법률체도와 집행기제 관련 법률 건립과 건전화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홍콩은 홍콩기본법을 기반으로 외교·국방을 제외하고 홍콩에 입법권, 사법권, 재판권의 자치를 부여하는 일국양제를 통해 중국 본토와는 다른 자유로운 체제 속에서 경제적 번영을 이루어 왔으나, 홍콩의 본국 송환법을 문제로 홍콩에서 시위가 발발하자 홍콩의 안전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홍콩보안법 제정
- **코로나19 이후 경제부양책** : 중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근 반세기만에 첫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경험하는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않자 매년 양회에서 제시해온 구체적인 경제 성장을 목표치 제시하지 않음
 -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대신 6가지 안정으로써 '육운(六穩)'과 함께 반드시 이룩할 내용으로 '육보(六保)'를 제시
 - ※ 육운 : 취업안정, 금융안정, 무역안정, 외자투자안정, 투자안정, 선행업무안정
 - ※ 육보 : 주민취업 확보, 기본민생 확보, 시장주체 확보, 식량 에너지 안정 확보, 산업 공급망 안정 확보, 기층행정조직 작동 확보
 - 중국은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 4조 위안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업 비용 절감 대책에는 세금 감면, 낮은 은행 금리, 사회복지기금 출연금 면제, 전기 등 공공요금 인하 등이 포함되며 이외에도 중국 당국은 2조 위안의 규모의 추가 재정지출과 국채발행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 다만 중국은 전면적 양적완화는 지양하는 모습을 보임. 리커창 총리는 "중국은 그동안 양적완화는 없다고 했는데 지금도 이런 방침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다만 특수시기에는 특수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물을 풀어 물고기를 기른다'고 표현한다"고 밝힘
 - 경제 부양 정책은 취업과 민생을 보호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투자의 경우 신형 인프라 건설, 차세대 정보 네트워크 개발, 첨단 신형 도시 개발 등 업무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힘
- **중국 민법전 제정** : 1949년 신중국 수립 이후 다섯 차례 시도 만에 중국 민법전 초안을 전인대에서 통과시켰으며, 2021년부터 1월부터 민법전이 시행될 예정인데 이는 중국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단일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의미가 있음
 - 중국 민법전(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은 총칙편과 물권편, 계약편, 인격권편, 혼인가정편, 상속편,侵权责任(권리침해책임)편 등 7편, 1,260조항으로 이뤄졌으며 많은 서구 국가의 민법전 조문이 2,000개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갈 길이 멀다는 평가도 있음

- 중국은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부정하는 사회주의 특징상 단일법률로써 민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체제 도입으로 민법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법에 따른 국가 통치' 이른바 의법치국(依法治国)이 선포되면서 본격적 민법전 구축 작업이 시작됨

〈중국 민법전 초안 주요 내용〉

총칙	태아 민사상 권리 명시, 혼외자 권리 보호
물권	주거권 도입, 공유 공간 임의사용 제한
계약	연 36% 이상 고금리 대출 금지
인격권	성희롱 방지 책임 강화, 생명윤리 강조
혼인가정	이혼 숙려기간 도입, 입양조건 완화
상속	노인 부양 주체 다변화, 유언 변경 가능
권리침해	고공 낙하물 상해 배상책임 강화 등

□ 2021년 양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

- **경제성장**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성장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았던 2020년과 달리 2021년에는 경제 성장 목표치를 제시할지, 제시한다면 코로나19 여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제시할지 주목
 - 시진핑 주석이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전면적 샤오강(小康·비교적 풍족한) 사회 건설을 공식 선언하고 코로나19 여파에도 경제성장을 이뤄냈음을 언급하였는데 이에 대한 후속적인 경제 정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
- **미-중 갈등** : 2020년 양회에서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고 전랑외교라 불리는 공세적인 외교태도를 통해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맞추어 중국의 대외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이목 집중
 - ※ 전랑(戰狼: 늑대 전사)외교 : 성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무력과 보복 등 공세적인 외교를 지향하는 중국의 외교 방식

출처

외교부 중국개황(2020)

IFANS 주요 국제문제분석 2020-34 "2020 중국 양회와 중국정치 : 중국 대외정책에 갖는 함의를 중심으로"(2020. 7. 1.)

아주일보 "[특파원스페셜] '4전5기' 中 민법전...중국인 삶 달라질까" 등 참조

해외의회 포커스 (제22호)

주요내용 요약

미국

- 미 하원,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의결
 - 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선동·민주주의 위협·평화적 정권 이양 방해 혐의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을 232 : 197 로 의결
 - 또한 하원은 수정헌법 25조 발동(대통령의 직무정지, 부통령 업무대행) 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펜스 부통령은 탄핵을 자제 하고 정권이양에 집중해야 한다며 반대
-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 D.C. 비상사태 선포
 - 의회 난입사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함에 따라 주방위군 1만 5,000명을 배치하고 대통령 취임식까지 경비태세 강화 예정

중국

-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제81차 위원장회의 개최
 - 제25차 상무위는 동물방역법(动物防疫法) 개정초안 등의 법률안과 국무원(国务院)에서 의결된 조약 등에 대해 심의·비준할 예정
- 홍콩 문제 관련 미국 등의 성명 발표에 대한 중국 외교부 입장 표명

일본

-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로 한일관계 한층 악화 우려
 -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 위안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일본 정부는 이에 반발
- 일본 정부, 코로나19 관련법 개정안 제출
 -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대처 강화를 위해 감염증법 등 개정안을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에 제출
- 한국 해경선과 일본 측량선 해상 대치

러시아

- 푸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년 메시지 송부
 -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방한 초청에 응할 것이라고 언급

기타

- 2,000억 원 규모 한국판 광역상수도 사업, 인도네시아 진출
 - 한국수자원공사 컨소시엄이 2,000억 원 규모의 까리안 광역상수도 국제경쟁입찰사업을 현지 기업과의 경쟁 끝에 최종 수주
- 프랑스 하원, 공화국원칙 강화를 위한 정부제출법안 심사
- 독일 연방회계검사원, 교섭단체 보조금 관리 투명성 강화 요구
 - 연방의회 내 6개 교섭단체가 의정활동을 위해 수령하는 보조금을 의정 활동이 아닌 교섭단체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
- EU, 북한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을 저해하는 행동 자제 촉구
 - EU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목표로 삼고, 한반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
- 독·불·영(E3) 3국 외교장관, 이란핵합의(JCPOA) 관련 공동 성명 발표
- 키르기스스탄, 조기대선 및 정부체제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
 - 잠정 개표결과에 따르면,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이원집정부제에서 대통령제로 정부 형태가 전환될 것으로 전망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 안토니우 구테레스 UN 사무총장, 사무총장직 재선에 도전
- UN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기관 신임 의장국으로 노르웨이 결정
- OECD, 사무총장 선출 절차 진행

의회외교활동 현황

- IPU 지정학적그룹 의장국 화상회의 실시

< 들여다 보기 > 「일본 내 한류와 협한」

□ 일본 내 한류

○ 한류 흐름

제1차 한류 (2004)	- 2000년대 초 TV 드라마 겨울연가의 인기로 중년 여성들을 중심으로 확산
제2차 한류 (2010 ~ 2011)	- 2010년대 초 K-POP(동방신기, 카라 등)을 중심으로 유행하였으나, 2012년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정치·역사 갈등으로 위축
제3차 한류 (2015 ~ 2019)	- 2010년대 중후반 K-POP 가수(BTS, TWICE 등) 및 화장품과 패션, 음식 등의 인기가 SNS를 통해 확산되며 다시 한류 붐 시작
제4차 한류 (2020 ~)	- 코로나19로 재택 근무가 늘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서비스를 통한 한국 드라마의 인기 급상승, 드라마 속 한국식 치맥 문화 활발

자료출처: KOTRA '일본인 안방에 불사착하는 4차 한류 바람' 이슈브리핑(2020. 1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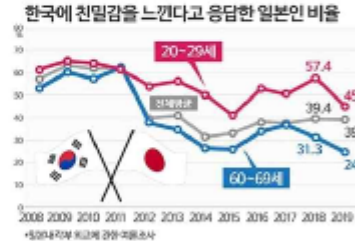
○ 최근 한류 현황(2015년 이후)

드라마	- 사랑의 불시착, 일본 넷플릭스 선정 '2020년 일본에서 가장 화제가 된 작품' 1위 ※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 敏充) 외상, 하시모토 도루(橋下 徹) 前 오사카 시장 등이 이례적으로 사랑의 불시착의 애청자임을 밝힘 - 이태원 클라쓰, 일본 넷플릭스 선정 '2020년 일본에서 가장 화제가 된 작품' 2위 - 일본 넷플릭스 선정 '2020년 일본에서 가장 화제가 된 작품' 톱 10 중 5편이 한국 드라마
음악	- 대형 음반매장 타워레코드 시부야점, 한 층 전체를 K-POP 매장으로 구성 - 아이돌 그룹 BTS의 한국어 앨범, 2020년 상반기 앨범 판매량 1위 ※ 해외 가수가 상반기 앨범 판매량 1위를 기록한 것은 1984년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이후 36년 만 -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 그룹 니쥬(NiziU)는 데뷔 전 이미 유명 가요제인 홍백가합전 출연 결정, 최단 기간 1억 스트리밍 달성 등 각종 기록 갱신
출판	- 소설 《82년생 김지영》, 일본 베스트셀러의 기준인 20만 부 돌파 - 소설 《아몬드》, 아시아권 소설 첫 일본서점대상 번역소설상 수상
소비재	- 한국식 치즈 핫도그, 치즈 닭갈비, 짜파구리 등 한국 음식의 유행 - 한국식 치킨 배달 증가 및 치맥 문화 전파 - 15~24세 日 여성 구매선호도 조사에서 화장품, 패션 등 5개 부문에서 韓 제품이 상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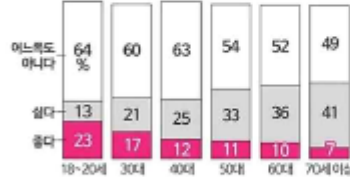
○ 최근 한류의 특징

- 어려진 주 소비층: 어릴 때부터 한류를 보고 자란 10~20대가 중심, 이들은 기존 세대와 달리 역사·정치 문제와 상관없이 한류를 즐김

※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9년 말 일본 내각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한류 주 소비층인 20~29세가 '한국에 친밀함을 느낀다'는 응답이 45.7%로, 전체 응답자 평균인 39.3%보다 약 16%p 높음



당신은 한국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단위: %)



- 주요 소비 매체 변화: 기존 TV나 잡지 등 전통 매체에 의존했었던 초기 한류와 비교하여 2015년도 이후의 한류부터는 인터넷, SNS 등으로 변화
- 다양한 분야로 확대: TV 드라마 뿐 아니라, K-POP, 출판, 음식, 패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 한국 문화 콘텐츠 세계화: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 글로벌 플랫폼인 넷플릭스를 통한 한국 드라마 접근성 증대, 세계화를 염두에 둔 가수 기획 등

□ 일본 내 혐한

○ 혐한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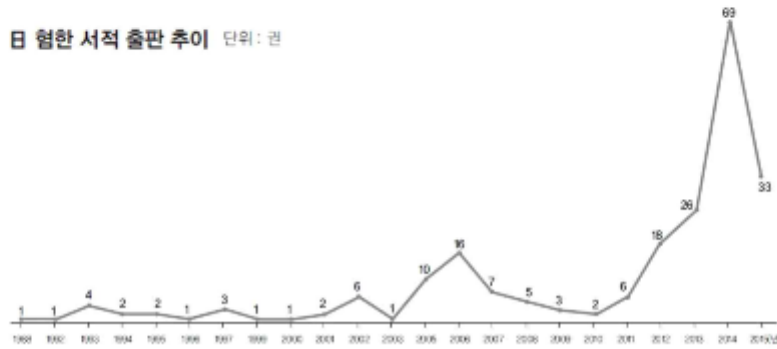
- 1991년 위안부 증언으로 한일 간 역사 갈등이 생겨남에 따라, 1990년대 말 우익 사관을 토대로 한 '새로운 역사 교과서' 작성과 채택 운동 전개
- 2000년 중반 한류가 유행하면서, 한국에 적대적인 일본인들이 혐한 세력화
- 2010년 초 이명박 前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혐한 세력이 커진 이후 박근혜 정권 들어 정점에 달했으며, 이후 재일 한국인을 겨냥한 혐오집회가 꾸준히 증가

○ 혐한의 원인

- 일본의 상대적 박탈감 및 경계심의 발현: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격차가 감소한 상황에서 한류 붐의 확산으로 자국 내 위기감 심화
 - ※ 뉴욕타임즈는 한국과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이 일본인의 반감을 샀고, 이 현상이 혐한 출판 붐으로 이어졌다고 분석(2006. 11. 19.,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혐한')
 - ※ 한국에서 극우 신케이신문 2자라고 비판받는 구로다 가쓰히로(黒田 勝弘)는 현재의 일본 사회에서 퍼지는 혐한 현상은 한국의 약진에 대한 경계심과 질투심이 그 원인이라고 평가

- 역사 문제: 일본이 사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역사 문제로 계속 반일 감정을 초래하고 있다는 인식이 일본 사회에 남아 있어 한국에 불만을 가진 일본인 존재
 - ※ 2014년 출판되어 인기를 끈 《한국인이 쓴 치한론(恥韓論)》은 '한일합방은 당시 국제법에 기초한 합법적인 일'이며, '위안부에 대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독도 문제를 국제재판에서 해결하지는 일본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음
- 출판계의 불황: 한류로 인해 혐한 서적이 인기를 끌자 출판사는 팔리기만 하면 내용에 상관없이 책을 출판, 혐한 서적을 읽은 이들이 늘어나면서 혐한 붐이 강화

日 혐한 서적 출판 추이 단위: 권



자료 출처: 주간조선(2017. 10. 15.)

○ 혐한 주세력: 네티윅

- 인터넷 상에서 보수적·국수적인 의견을 올리는 사람들이 주세력으로, 그 구성이 다양하고 내부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어 하나의 단일체로 파악하기 어려움
- 네티윅은 스스로를 우익이 아니라 시민운동이라 부르며, 부정적 이미지의 기존 보수와는 선을 그음으로써 다수의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재일 한국인의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의 일부를 구성, 재특회는 오프라인에서 헤이트 스피치 및 혐한 시위를 주도

○ 혐한에 대한 일본 사회의 대응

- 법령 제정: 2016. 5. 일본 의회에서 특정 민족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 통과되었으며, 재일한국인이 많은 지역인 오사카시는 「헤이트 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중에 있음
 - ※ 위 법령들이 처벌조항이 없다는 한계는 있지만, 재특회 前 간부에게 헤이트 스피치를 이유로 벌금형이 부과된 사례(2020. 12.)가 있었음
- 시민운동: 2013년에 결성된 단체 '카운터스'는 재특회의 혐오 집회 저지 운동을 하고 있으며, 거짓 뉴스를 삭제하고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해외의회 포커스 (제23호)

주요내용 요약

미국

-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 취임
 - 바이든 대통령은 1. 20. 취임식(온라인)을 통해 제46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연설을 통해 분열된 미국 사회를 통합하고 하나된 미국을 재건하며, 국제사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메시지 전달
-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상원 송부 지연
- 미국 상원, 5개 부처 장관 인준청문회 실시

중국

- 중국, 성급양회(省級兩會) 개막
 - 허난성(河南省) 인민정치협상회의(1. 17.)를 시작으로 31개 성급양회(22개 성, 4개 직할시, 5개 자치구) 개최 예정
- 중국, 2020년 주요 경제 지표 발표
 - 2020년 GDP 101조 5,986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국가통계국)

일본

- 중참의원 제204회 정기회 소집
 - 중참의원 제204회 정기회 회기는 1. 18.부터 6. 16.까지(150일간) 열릴 예정
- 스가 총리,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 실시
 - 1. 18. 소집된 제204회 정기국회에서 스가 수상은 취임 후 첫 국회연설을 하였으며, 긴급사태선언의 조기해제 의지 언급
- 일본 정부, 역대 최대 예산안 국회 제출
 -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대책 등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액 106조 6,097억 엔으로 이루어진 역대 최대인 2021년도 예산안을 1. 18. 국회에 제출

러시아

- 러시아 하원, 춘계 회기 시작
 - 제8대 하원 임기 중 마지막 회기로, 1,234개의 법안 심사 예정
- 러시아 전국민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 1. 18.부터 전국민 대상 무료 접종 시작, 목표접종률(인구 60%) 중 1분기 내 2천만 명 1차 접종 완료 계획

기타

- 독일 연방의회, 제2차 시민의회 개최 추진
- 카자흐스탄 제7대 하원선거 결과 및 개원
 - 집권여당인 누르오타당이 71.09%를 득표하여 승리
- 이탈리아 상·하원, 연립정부 붕괴 직전 신임안 가결
- EU, 유럽 금융시장 강화를 위한 유로 국제화 추진
 - 1. 19. EU 집행위원회는 브렉시트 및 코로나19로 취약해진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로 국제화 추진 계획 발표
- 스위스, 코로나19 대책법 폐지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예정
- 소말리아 주둔 미군 철수 완료
- 인도네시아 서부술라웨시주 강진 발생
- 라오스 차기 최고 국가지도자에 통론 시술릿 총리 선출
 - 라오인민혁명당(LPRP)은 1. 15. 중앙위원회를 열고 분당 보라치트 라오인민혁명당 서기장 후임으로 통론 시술릿 총리 선출

국제회의및 국제기구

- 영국, G7 정상회의에 한국 공식 초청

의회외교활동 현황

-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
- 프로데 솔베르그 주한노르웨이대사,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

< 들여다 보기 > 미국의 탄핵제도

□ 미국 탄핵제도 개요

- 미국은 고위 공무원이나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어있는 법관 등 일반적인 사법 절차로 징계·처벌하기 어려운 자가 법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의회의 소추를 통해 처벌 또는 파면할 수 있도록 탄핵(Impeachment) 절차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음
- 탄핵의 역사는 1376년 영국 의회가 국왕 에드워드 3세의 측근인 래티머 남작 4세를 최초로 탄핵하는 결정으로부터 시작됨. 최초의 탄핵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로 처벌이 어려운 국왕이 임명한 장관에 대해 기소하고 징역과 벌금형에 처하는 수단에서 시작하였으며, 이후 공공신택의 침해 혹은 위반을 포함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탄핵이 가능하다는 이론으로 발전하였고, 이것이 일반 민·형사 사건과 구별되는 차이점이 됨. 즉, 탄핵제도는 형사제도적 성격에서 시작하여 미국에서는 헌법 제정 당시 권력을 견제하는 제도로 마련되었음
- 연방헌법이 수립되기 전 이미 각 주는 헌법에 실정(maladministration)과 부패(corruption)에 대해 탄핵을 규정하였으며, 연방헌법 수립시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부여와 관련하여 행정부의 권한 침해의 우려가 있었으나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막는다는 취지에 합의하며 영국의 예에 따라 하원 기소, 상원 재판의 틀을 차용함

□ 미국 연방헌법상 탄핵관련 규정 및 절차

- 연방헌법에 탄핵절차를 규정
 -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모든 공무원(all civil officers)에 대해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밖의 중대한 범죄 및 비행(High Crimes and Misdemeanor)으로 탄핵받고 유죄 판결에 따라 면직되며(제2조제4항), 하원은 탄핵소추권(제1조제2항), 상원은 탄핵을 심리할 권한을 가짐(제3조제6항). 대통령 대상으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장을 의장(그 밖의 경우는 상원의장이 의장)으로 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으며(제3조제6항), 탄핵결정은 그 직으로부터 해임과 명예직 및 주식회사 등의 직을 맡을 자격을 박탈하는 것에 그치고(제3조제7항), 탄핵된 자는 사면되지 않으며(제2조제2항제1문), 법률에 의한 기소, 심리, 판결, 처벌이 가능함(제3조제7항)
- 탄핵 진행 절차
 - 탄핵소추권을 가진 하원은 (1)본회의에서 법사위의 탄핵조사 승인 (2)법사위의 조사 및 탄핵소추안 작성 (3)본회의의 탄핵소추안 심사 및 탄핵결의안 표결 등 3단계로 이루어짐. 별도 정족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정족수인 재적과반, 출석과반 찬성에 의해 의결하며, 하원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상원 탄핵심판에서 검사(prosecutor) 역할을 수행할 하원소추위원(house manager)을 결정
 - 상원에 송부되면 연방헌법 외에 정해진 절차가 거의 없으므로 탄핵심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의사규칙을 의결함.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담당하는 우리와 달리 의결로써 탄핵심리를 위해 탄핵심판소를 구성하고 피소추인에게 구두변론 일정을 통지함. 재판의 의장은 다른 탄핵절차와 달리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아니라 연방대법원장이 수행하며 상원의원 100명 전원이 배심원, 하원소추위원단이 검사역으로 재판에 참여하여 진행

- 탄핵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더라도 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상원에서 유죄판결(최종 결정)시 부통령이 잔여 임기를 수행. 탄핵결정을 받은 자는 해당 직위를 박탈당하는 데 그치며,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별도 형사 기소될 수 있음. 또한 유죄판결에 따라 공무담임권은 제한됨

□ 미국 탄핵 관련 논의

○ 탄핵사유와 관련한 논쟁

- 미연방헌법은 탄핵사유를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밖의 중대한 범죄 및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중대한 범죄(high crime) 및 비행(misdemeanor)은 영국법에서 차용한 구절로써, 반역죄와 수뢰죄는 비교적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중대한 범죄의 의미는 헌법과 법률상 명확하지 않아 이를 정의하는 데 논쟁이 있음
- 미국의 대통령제 하 삼권분립을 통한 권한행사 견제와 정치·국가 안정화 사이에서 어떤 범죄가 탄핵 요건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명백하고, 반역죄와 뇌물죄의 기준과 비교하여 중대하거나 동일한 정도와 규모가 되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권한을 심각하게 악용한 경우여야 함. 이 해석에 대해 중대한 범죄와 구분되는 비행(disdemeanor)을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조문을 형식적으로 해석하면 안된다는 의견 존재
- 미헌법상 탄핵제도는 영국의 제도를 차용하였으며 영국의 탄핵 규정상 용어인 중대한 범죄는 국가나 국민을 목표로 하는 범죄로 기술적인 형법위반이 아닌 심각한 권력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실정(maladministration), 공금 횡령, 왕과 정부에 대한 그릇된 구금, 법관에 대한 폭력 또는 협박을 의미함. 이와 병렬하는 단어인 비행은 중대한 범죄의 반대말이 아니라 탄핵사유로 열거된 반역죄, 수뢰죄, 중대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의 집행권을 남용하는 공권력의 위법행위를 지칭하는 의미로 쓰임. 다만 영국 헌법상 탄핵사유인 중대한(high) 범죄는 다소 모호하며 관행과 판례에 따르기 때문에 미국과 비교해서 훨씬 넓은 범주로 인정됨

○ 역대 탄핵의 위법행위사유 유형

- 첫째, 권한의 남용(앤드류 잭슨 - 전쟁장관 해임 시도, 리처드 닉슨 - 법인 은닉·보호 및 사법조사 방해, 시민의 권리 침해, 의회 소환 거부, 빌 클린턴 - 허위 정보 제공)
- 둘째, 직무의 기능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빌 클린턴 - 거짓 증언, 증거 은폐, 대통령으로서 신뢰 배신)
- 셋째, 부적절한 목적 또는 사익 추구의 권한 남용(제임스 펙 판사 - 법정 모욕, 토마스 포터스 판사 - 실리 사건의 변호사와 금융 부패에 연루)

□ 역대 미국 대통령 탄핵 사례

○ 앤드류 존슨 대통령(1968)

- 링컨 대통령 암살 사건(1865) 후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존슨은 전후 남부 정책과 관련하여 북부 공화당 급진파와 갈등을 빚던 중 스탠튼 전쟁장관 해임 시도와 관련하여 관직보유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후 탄핵 대상이 되었음. 이후 하원은 해당 혐의를 포함한 11건의 중대한 범죄 및 비행을 사유로 1868. 3. 3. 표결을 통해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으며, 상원은 3. 6. 탄핵 재판을 소집, 두 달 간의 심리를 통해 5. 16. 표결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의결정족수인 36표에 1표가 모자란 35표 찬성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탄핵은 부결되었음

○ 리처드 닉슨 대통령(1974)

- 재선 선거운동 중 호텔 도청 설치(워터게이트 스캔들)를 발단으로 탄핵 대상이 되었음. 해당 사건은 특별검사팀과 상원 특별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었으며, 재선 임기 시작 후 상원 청문회에서 사건을 은폐하려는 대통령의 녹음 자료가 있다는 증언이 나오며 해당 자료의 제출 요구가 이어지자 위기를 느낀 닉슨은 법무장관에 특검 해임을 명령하였음. 이를 거부한 법무장관, 법무부장관은 사임하고 승무차관이 특검을 해임하였으며, 닉슨은 행정특권(일종의 비밀보장특권)을 주장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료제출을 피할 수 없었음. 하원은 권한 남용과 사법절차 방해, 의회모욕을 사유로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며 닉슨은 8. 5. 백악관 집무실 녹취록을 공개하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으나 자신이 은폐에 직접 관여한 것이 분명해지자 8. 9. 자진 사퇴함으로써 일단락되었음

○ 빌 클린턴 대통령(1998)

- 주지사 시절 주정부 직원이었던 폴라 존스가 제기한 성추행 소송과 백악관 인턴직원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불륜 스캔들 등이 발단이 되었음. 클린턴은 르윈스키와의 스캔들을 부인하고 대국민 연설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대배심 증언에서 부적절한 관계임을 시인하며, 두 달 뒤인 10. 8. 하원은 탄핵소추(찬 258 : 반 176) 하였음. 케네스 스타 독립특별검사의 수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며 별도의 하원 위원회의 조사절차 없이 12. 19. 성추문 관련 위증 혐의(찬 228 : 반 206)와 사법 방해 혐의(찬 221 : 반 212)로 두 탄핵안을 모두 가결시켰으나 다음해 2. 12. 상원의 표결에서는 위증(찬 45 : 반 55)과 사법방해(찬 50 : 반 50) 모두 부결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2019, 1차)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2020년 대선에 개입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내부고발로부터 시작되었음. 차기 대선 주자 조 바이든의 차남인 한터 바이든이 이사로 재직하던 에너지기업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 해임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바이든 일가 수사를 요청함.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외교정책을 사익을 위해 운용했다는 혐의로 12. 18. 탄핵소추를 본회의에 올려 직권 남용(찬 230 : 반 201)과 의회 방해(찬 229 : 반 200) 혐의로 가결시켰으나, 다음해 2. 5. 상원은 직권 남용(찬 48 : 반 52), 의회 방해(찬 47 : 반 53)에 무죄 판결을 내리며 기각되었음

□ 2021년 미연방의회 하원, 트럼프 대통령 재차 탄핵소추, 경과와 전망

- 미하원이 2021. 1. 대통령을 재임 중 두 번째로 탄핵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최초로 두 차례 탄핵소추받은 대통령이 되었음
- 2020년 대선 이전부터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합주에 대한 소송과 지지자들의 불복을 부추겨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 6. 의회난입사태를 주도했다며 내란 선동(incitement of insurrection)을 한 점과 대선 승리 거짓 발언으로 민주주의 위협과 평화적 정권 이양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하원은 1. 13. 본회의에서 찬 232 : 반 197로 탄핵소추안을 의결
-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불복 발언이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펠로시 하원의장은 과거 핀레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을 야기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수 없다는 사례를 들어 탄핵소추 이유를 밝힘
- 펠로시 하원의장과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절차 개시 전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여 대통령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하고 대통령 임무를 대행하도록 촉구하였으나, 펜스 부통령은 국익에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의회는 대통령 탄핵을 자제하고 정권이양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동 결의안에 반대함에 따라 트럼프는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재임
- 탄핵소추안을 상원 송부하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 서둘러 임기 전 트럼프의 직무를 정지하자는 입장과 바이든 대통령 임기 시작에 따른 정책 추진과 정권 인수인계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입장으로 나뉘었으나, 차기 행정부의 정책 추진을 위해 송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100일 전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
- 한편, 탄핵절차는 대통령 임기 종료 후에도 진행 가능하며, 비슷한 사례로 1876년 벨크넵 전쟁장관이 탄핵소추 2시간 이전에 사임했음에도 의회는 탄핵심판을 진행한 사례가 있음. 트럼프는 대통령 임기 전 자진 사퇴하지 않았으며, 탄핵절차 진행에 따라 최종 유죄 판결이 날 경우 탄핵된 자의 공무담임권 제한 규정에 따라 2024년 대선에는 출마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

출처

대통령 탄핵, '중대한 범위' - 미국과 한국의 비교 - (정영화, 미국헌법연구 제27권 제3호, 2016. 12.)

미국 하원 홈페이지(<https://history.house.gov/Institution/Origins-Development/Impeachment>)

해외의회 포커스 (제24호)

주요내용 요약

미국

- 하원, 트럼프 前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상원 송부
 - 하원은 트럼프 前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송부하였으며 상원은 2. 9.부터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 발표
 - 현재로서는 탄핵안 가결을 위한 정족수에는 못 미치는 상황
- 상원, 국무장관 등 4명에 대한 임명 인준
- 상원 공화당, 대법원 구성원 유지를 위한 헌법 개정 추진
 - 미 상원 공화당은 민주당의 연방대법관 증원에 반대하며 헌법 개정을 통해 대법원 구성원수를 유지하는 방안 추진

중국

-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 간 전화 회담 실시
 - 문재인 대통령은 1. 26.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회담을 실시, 양국 정상이 2021-2022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선포

일본

- 양원, 코로나19 관련 추경안 심의 및 특별조치법 개정 본격화
- 스가 총리, 국회 예산 심의 중 의료체계 부실 사태에 대해 사과
 - 스가 요시히데(菅 義偉)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의료체계의 부실사태에 대해 사과
- 스가 총리, 바이든 美 대통령과 첫 전화회담 실시

러시아

- '공정러시아당' 중심으로 야 3당 합당 추진
 - 9월 하원선거를 앞두고 하원의석 30% 확보를 목표로 '진실을 위하여당', '러시아 애국자당'과 합당 추진
- 야권인사 나발니 석방 요구 시위 러시아 전역 개최
 - 나발니 운영 반부패재단을 중심으로 전국적 시위 개최, 정부당국 강경대응

기 타

- 호주, 뉴스사용료 강제 추진하는 '뉴스 미디어 협상법' 추진
-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공사 착공 시정을 백신 접종 이후로 연기
- 유럽의회,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 규탄 결의안 채택
 - 홍콩 시민운동가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고, 관련 관료들을 제재할 것을 요구
- 한-EU FTA 전문가패널,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인정
 - 한국이 한-EU FTA 협정에 따른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위반한 바 없다고 결론
-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시행을 위한 로드맵 발표
- 튀니지, 전국적인 정부 반발 시위 격화
 - 코로나19 사태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표한 전국적인 봉쇄조치, 야간통행 및 집회 금지령에 대한 반발로 대규모 시위 발생

국제회의및 국제기구

- 대한민국, WTO 한-미 AFA(불리한 가용정보) 분쟁 승소
 -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하여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측 조치 8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승소를 판정한 WTO 패널 보고서를 회람

의회의교차활동 현황

- 미하엘 라이펜슈틀 주한독일대사,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
-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모즈타바 졸누리 이란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 화상면담

해외의회 포커스 (제25호)

주요내용 요약

미국

- 바이든 행정부 제안 경기부양책, 민주당 단독 의결 추진
 -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으로 의회에 제안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 패키지에 대하여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독자적으로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
- 상원, 첫 성 소수자 및 이민자 출신 장관 인준
- 바이든 대통령, 미얀마 쿠데타 관련 제재 경고
 - 바이든 대통령은 미얀마 쿠데타와 관련하여 새로운 제재 프로그램 부과, 원조 축소 등을 경고

중국

- 중국 전인대, 양회(两会) 기간 취재 관련 공지
- 양제츠 중국 정치국 위원, 미·중관계전국위원회와 화상회의 개최

일본

- 코로나19 관련 특별조치법·감염증법 개정안, 중의원 가결
 -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된 특별조치법과 감염증법 개정안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참의원으로 송부
- 정부, 긴급사태선언 연장 결정
 -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발령된 긴급사태선언을 도쿄, 오사카 등 10개 지역에 대해 3. 7.까지 연장한다고 발표

러시아

- 러-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연장 합의
 - 양국 정상간 합의 및 국내절차들 완료하여 New START 조약 2026년까지 5년간 연장, 러-미간 핵무기감축 협정 유지

기 타

- 베트남 응우옌 푸 쯙 공산당 서기장, 3연임 공식 확정
- 미얀마 군부 쿠데타 공식 선언, 1년간 비상사태 선포
- 이란 정부, 한국 선박 내 선원 19명 억류 해제 결정
 - 2. 2. 한국 외교부는 1. 4. 환경오염을 근거로 억류된 한국케미호 선원 19명의 억류 해제 사실 발표
- EU, 코로나19 백신 수출허가제 시행
 - 1. 29. EU 집행위원회, 코로나19 백신의 역외 수출 제한을 위한 수출 허가제 도입 발표
- 잉글랜드 지방선거 최초 탈북민 출신후보 출마
- 영국 정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공식신청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의회 남녀의원 수 불균형 관련 헌법소원 기각
- 소말리아, 폭탄 테러로 9명 사망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 UN 안전보장이사회,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에 대한 긴급회의 소집
- OECD, 2021 글로벌 의회 네트워크(GPN) 화상회의 개최 예정
- 므타(MIKTA) 개발협력기관협의회 발족

외교외교활동 현황

-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페카 멧초 주한핀란드대사 면담
-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아키바 토르 주한이스라엘대사 면담
-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안드레이 포프코프 주한벨라루스대사 면담
-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대사 면담
-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싸이드 바담치 사베스타리 주한이란대사 면담

[해외의회 포커스 \(제26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27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28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29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30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31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32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33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34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35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36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37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38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39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40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41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42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43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44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45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46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47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48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49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50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51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52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53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54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55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56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57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58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59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60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61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62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63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64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65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66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67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68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69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70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71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79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78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77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76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75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74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73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72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86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85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84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83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82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81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80호\)](#)

해외의회 포커스 (제88호)

주요내용 요약

미 국

- 미국 상원 민주당, 「미국 내 테러 방지 법안」 처리 필요성 강조
 - 미국 상원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상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번 주 (5월 셋째주) 내로 하원에서 동 법안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하며, 하원 통과 시 조만간 상원에서 투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
- 미국 국민 77%,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우려에도 러시아 제재 지지
- 미국 상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발의
- 주우크라이나 키이우 미국대사관 업무 재개
-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前 행정부의 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등 쿠바와 관계 개선에 나설 듯

중 국

- 중국-타지키스탄 의회정상 간 화상회의 개최
- 한중 외교장관 화상 회담 개최
- 중국, 상하이 6월 1일 봉쇄 해제 목표

일 본

- 일본 의회, 신약 및 신규백신 '간접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약기법」 일부개정법률 성립
- 일본 호소다 중의원 의장,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비판 수용 및 발언 자제 입장 표명
- 일본 정부, 물가급등 긴급대책 추진을 위한 2조 7,009억 엔 규모의 추경안 각의 결정
 - 이번 추경안에는 유가 급등 대책으로 석유회사 보조금 등 1조 1,739억 엔, 예비비 적립 1조 5,200억 엔 등을 계상했으며 코로나19 대응 예비비의 사용처를 물가급등 대책으로도 확대하는 한편, 추경 재원은 전액 적자 국채 추가발행으로 조달할 예정
- 일본 정부, 코로나19 백신 3회 접종한 한국→일본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 실시

러시아

- 볼로딘 하원의장, 우크라이나 전범포로 교환 금지 제안
- CSTO(집단안보조약기구) 정상회의 개최

기 타

- 베트남-인도네시아, 입국자 출발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 호주, 5월 21일 총선 사전투표 실시
- 아랍에미리트 칼리파 대통령 서거, 무함마드 왕세제 차기 대통령 선출
- 칠레, 새 헌법 초안 공개
- 영국-유럽 의회파트너십회의 첫 회의
- 마크롱 대통령, 엘리자베스 보른 신임 총리 지명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5월 기후변화 각료급 회의 개최
-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HCQO) 워킹그룹 개최
- 핀란드·스웨덴, NATO 가입 본격 돌입

의회외교활동 현황

- 인도네시아 상원 법제위원회 대표단, 한-인도네시아 의원친선협회 면담
- 베르나드 슈라이넬 주한슬로베니아대사대리, 김민기 한-슬로베니아 의원친선협회장 면담
- 알 부카이 요르단-한 의원친선협회장, 김희국 한-요르단 의원친선협회장 면담

CONTENTS

I. 해외의회 주요 이슈

1) 미국

- 미국 상원 민주당, 「미국 내 테러 방지 법안」 처리 필요성 강조 1
- 미국 상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발의 2
- 미국 하원, 상원 이어 아세안 지지 결의안 발의 3
- 미국 상원 공화당 지도부, 우크라이나 방문 4
- 미국 상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동맹 강조 결의안 통과 4

2) 중국

- 중국-타지키스탄 의회정상 간 화상회의 개최 5

3) 일본

- 일본 의회, 신약 및 신규백신 '긴급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약기법」 일부개정법률 성립 5
- 일본 중의원, '어린이 가정청' 설립을 위한 관련 법안 의결 6
- 일본 호소다 중의원 의장,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비판 수용 및 발언 자제 입장 표명 .. 7

4) 러시아

- 볼로딘 하원의장, 우크라이나 전범포로 교환 금지 제안 8
- 마트비옌코 상원의장,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8

5) 영국

- 영국-유럽 의회파트너십회의 첫 회의 9

6) 독일

- 독일 연방의회, 1975년 에너지안보법 개정안 의결 10
- 독일 연방의회, 2022년 조세감면법 개정안 의결 10

II. 주요국 정세 브리핑

1) 미국

- 미국 국민 77%,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우려에도 러시아 제재 지지 11
- 주우크라이나 키아우 미국대사관 업무 재개 11
- 미국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前 행정부의 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등 쿠바와 관계 개선에 나설 듯 12
- 미국 버냉키 前 연준 의장,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 마흡과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경고 13
- 미국 코로나19 사망자수 100만 명 돌파 13

2) 중국

- 한중 외교장관 화상 회담 개최 14
- 중국, 상하이 6. 1. 봉쇄 해제 목표 14

3) 일본

- 일본 정부, 물가급등 긴급대책 추진을 위한 2조 7,009억 엔 규모의 추경안 각의 결정 15
- 일본 정부, 코로나19 백신 3회 접종한 한국→일본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 실시 16
- 한국 외교부, 하야시 외무상 방한 중 '한국의 독도 인근 무허가 해양조사'를 보도한 일본 언론에 정당한 활동이라고 일축 17

4) 러시아

- CSTO(집단안보조약기구) 정상회의 개최 18
- 러시아 정부, 수출 금지 및 제한조치 관련 정부령 2차 개정 19

5) 기타

- 베트남-인도네시아, 입국자 출발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20
- 호주, 5. 21. 총선 사전투표 실시 21
- 아랍에미리트 칼리파 대통령 서거, 무함마드 왕세제 차기 대통령 선출 21
- 칠레, 새 헌법 초안 공개 22
- 영국 외교장관, 북아일랜드 의정서 개정 법안 추진 발표 22
- 영국, 스웨덴-핀란드와 상호안보협약 체결 23
- 마크롱 대통령, 엘리자베스 보른 신임 총리 지명 23
- 마크롱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회담 24
- 독일 집권여당 신호등연정, 의석수 대폭 축소 선거법 개정안 제안 24

III. 의회 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동향

- 1) UN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5월 기후변화 각료급 회의 개최 26
- 2) OECD
 -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HCQO) 워킹그룹 개최 27
- 3) NATO
 - 핀란드·스웨덴, NATO 가입 본격 돌입 27

* 의회외교활동 현황

- 1) 면담
 - 인도네시아 상원 법제위원회 대표단, 한-인도네시아 의원친선협회 면담 28
 - 베르나드 슈라이넬 주한슬로베니아대사대리, 김민기 한-슬로베니아 의원친선협회장 면담 29
 - 알 부카이 요르단-한 의원친선협회장, 김희국 한-요르단 의원친선협회장 면담 30

I. 해외의회 주요 이슈

1) 미국

□ 미국 상원 민주당, 「미국 내 테러 방지 법안」 처리 필요성 강조(The Hill/Politico/NYT, 5. 14./5. 18.)

- 발의자: 브래들리 스콧 슈나이더(Bradley Scott Schneider, 민주당 하원의원)
- 법안명: 미국 내 테러 방지 법안(Domestic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22)(H.R. 350)
- 美 상원 민주당의 척 슈머(Chuck Schumer) 원내대표는 상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번 주(5월 셋째 주) 내로 하원에서 「미국 내 테러 방지 법안」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하며, 하원 통과 시 조만간 상원에서 투표를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
 - 동 법안은 ▲ 미 의회가 국토안보부(DHS), 법무부(DOJ), FBI에 국내 테러 사무소를 설치해 국내 테러 활동을 감시하고 조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소는 6개월마다 향후 10년간 국내 테러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또한 모든 연방 증오 범죄 혐의와 유죄 판결을 검토하여 사건이 국내 테러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그 밖에 연방 정부가 국내 테러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회가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동 법안 처리에 대한 추진은 5. 14. 벌어진 백인우월주의자로 추정되는 18세 소년이 버팔로 슈퍼마켓에서 총기를 난사하여 10여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사건* 등 증오범죄 대한 대응 차원으로 알려짐
 - ※ 버팔로 총격 사건의 희생자 중 11명은 흑인이었고, 이 사건에서 총격범은 인종 차별적이고 극우적인 '위대한 대체(Great Replacement)' 이론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지지했다고 밝힘
 - 슈머 대표는 미 의회가 폭력 행위를 촉발할 수 있는 소위 대체 이론* 등 편협한 이론을 언급하는 이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하며, 미국 유명 TV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2016년부터 400회 이상 동 단어를 언급하고 있다고 비판함
 - ※ 대체 이론은 2011년 프랑스 인종주의작가 르노 카뮈(Renaud Camus)가 그의 저서에서 주장한 내용으로, 백인들이 이민에 의해 주도된 유색 인종 공동체의 인구학적 증가를 통해 권력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임
 - 또한, 공화당 동료들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편협한 차별적 언행인 대체 이론 등에 민주당과 함께 대응해줄기를 희망한다며 공화당의 지지를 이끌어낼 계획도 밝혔으며, 같은 날 상원 딕 더빈 (Dick Durbin) 법사위원회 위원장도 공화당 동료들에게 동 법안을 지지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동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 의회가 대용량 살상 무기 거래를 금지하고 모든 총기 구매에 대한 배경 조사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으며, 범죄 공모

내용이 사전에 공유된 소셜미디어(SNS)의 책임론이 주장되고 있음

- 1968년 제정된 「총기 규제법」(Gun Control Act)에 따르면 대체로 소총과 탄약은 18세 이상의 개인에게, 탄약을 포함하여 권총이라고 불리는 산탄총과 소총이 아닌 모든 총기는 21세 이상의 개인에게 판매될 수 있으나, 각 주마다 특정 유형의 총기와 관련된 연령 요건이 제각각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강화된 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음
- 또한 버팔로 총기사건 가해자가 사전에 온라인 소셜 포럼 등을 통해 수백페이지 분량의 범죄 선언문을 작성하고 공유한데 대해, 모니터링 되어야 하는 범죄행위를 방지한데 대한 관련 소셜미디어 CEO 및 이를 알고도 침묵한 암묵적 공범에 대한 책임이 강하게 추궁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상황

□ 미국 상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발의(VOA/미국 입법정보시스템, 5. 13.)

- 발의자: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공화) 상원의원
- 법안명: A bill to reauthoriz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and for other purposes.(S.4216)
- 발의배경 및 주요내용
 -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가 처음 제정한 후 세 차례에 걸쳐 연장된 바 있으며, 이번 회계연도인 오는 9월 말 만료될 예정임. 이에 동 법안은 올해 만료될 예정인 북한인권법을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것이 핵심으로, ▲ 대북 방송에 대한 지원을 유지 ▲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 ▲ 탈북 난민에 대한 보호를 지속하도록 하는 내용 ▲ 탈북 난민 송환 관련 제재를 승인하는 조항 등이 포함됨
 - 또한, 이번 법안에서는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의회의 인식을 고조시키고 이를 지원하는 내용*도 처음으로 추가됨
 - ※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19 대유행을 다루는 데 있어 투명한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며, 국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 단체가 북한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북한에 촉구하고, 미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이 북한 주민과 북한 내부의 인도적 지원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명기함
 - 앞서 미국 하원에서도 지난 3월 말, 영 김(Young Kim, 공화) 의원 주도하에 아미 베라(Ami Bera, 민주)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발의된 바 있는데, 영 김 의원은 상원에서도 동 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하며 상·하원에서 모두 최종 통과되길 고대한다고 언급함
 - ※ 미국 하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발의(2022. 3. 31.)
 - 발의자: 영 김(Young Kim, 공화) 하원의원
 - 법안명: To reauthoriz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and for other purposes(H.R.7332)

□ 미국 하원, 상원 이어 아세안 지지 결의안 발의(VOA/미국 입법정보시스템, 5. 13.)

- 발의자: 호아킨 카스트로(Joaquin Castro, 민주당) 하원의원
- 결의안명: Expressing support for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its member states, and the United States-ASEAN Special Summit in Washington, DC, and reaffirming the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o continue to remain a strong, reliable, and active partner to ASEAN in the Indo-Pacific.(H.Res.1106)
- 발의배경 및 주요내용
 -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5. 11.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발의됨. 동 결의안은 외교위원회의 호아킨 카스트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앤 와그너(Ann Wagner, 공화) 의원과 아미 베라(Ami Bera, 민주당) 의원, 그레고리 믹스(Gregory Meeks, 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동참하였는데, 5. 12.과 5. 13. 이틀 동안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국과 아세안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의됨
 - ※ 미국 상원 아세안지지 결의안 발의(2022. 5. 5.)
 - 발의자: 로버트 메넨데즈(Robert Menendez, 민주당) 상원의원
 - 결의안명: A resolution expressing support for the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its 10 member states, Brunei, Cambodia, Indonesia, Laos, Malaysia, Myanmar, the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and Vietnam, and the United States-ASEAN Special Summit in Washington, DC, and reaffirming the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o continue to remain a strong, reliable, and active partner in the ASEAN region.(S.Res.616)
 - ※ 아세안은 동남아시아국가 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버마(미얀마), 싱가포르, 필리핀 등 10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 동 결의안은 아세안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아세안의 강력하고 의지할 수 있는 협력국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약속함.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 합의를 완전히 준수하고 이행하는 아세안 국가들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면서 다른 모든 아세안 회원국들도 그렇게 하기를 독려한다고 명시하였음. 그 밖에 아세안이 일본, 한국, 호주, 유럽연합(EU), 타이완, 그리고 인도를 포함한 역내 미국의 협력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힘

□ 미국 상원 공화당 지도부, 우크라이나 방문(VOA, 5. 15./The Hill, 5. 16.)

- 미국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5. 14.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하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대통령과 면담을 실시
 - 이번 방문단에는 공화당의 미치 매클렐(Mitch McConnell) 상원 원내대표, 수전 콜린스(Susan Collins), 존 바라소(John Barrasso), 존 코닌(John Cornyn) 상원의원 등이 참여
 - 면담 직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은 미국 의회와 국민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의미하는 강력한 신호라고 평가하였으며,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와 자유를 위해서도 투쟁에 도움을 준 미국의 지도력에 감사하다고 덧붙임
 - 이번 미국 상원 공화당 지도부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민주당) 하원의장 등 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현지를 찾은 지 2주 만에 이루어진 것임*
 - ※ 펠로시 의장은 4. 30. 애덤 쉬프(Adam Schiff, 민주당) 정보위원장, 그레고리 믹스(Gregory Meeks, 민주당) 외교위원장 등 6명의 하원의원과 함께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면담하였음

□ 미국 상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동맹 강조 결의안 통과(AFP/미국 입법정보시스템, 5. 11.)

- 발의자: 짐 리쉬(Jim Risch, 공화) 상원의원 대표 발의
- 결의안명: A resolution reaffirming the importance of United States alliances and partnerships(S.Res.122)
- 주요 내용
 - 동 결의안은 2022. 3. 18. 상원에 발의되어 3. 24. 상원 외무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의 한국-일본 순방(5. 20. ~ 24.)을 앞둔 5. 11. 상원 전체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
 - 동 결의안에서는 한국, 일본, 호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등 동맹국과의 방위 약속을 언급하고, 특히 한국과의 동맹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며, 북한 및 새로운 위협에의 대응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함을 강조

2) 중국

□ 중국-타지키스탄 의회정상 간 화상회의 개최(新華社, 5. 17./전인대 홈페이지, 5. 18.)

- 5. 17. 리잔수(栗戰書)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타지키스탄 루스탐 에모말리(Rustam Emomali) 상원의장과 화상회의를 가짐
- 리 위원장은 양국 정상간 합의로 개발공동체와 안보공동체를 구축하여 정치적 상호신뢰와 제반분야 협력이 강화된 것을 높이 평가함. 또한 올해 2월 양국 정상회의를 통해 형성된 양국관계와 협력에 대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양국관계 발전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중국의 핵심이익과 주요 관심사에 대한 타지키스탄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며 일대일로와 타측의 2030 국가발전 전략을 연계하여 농업, 에너지, 인프라, 디지털 경제 등 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의함. 또한 방역, 문화협력을 강화하고 국민 간, 특히 청소년 간 우호증진을 위한 교류 활성화를 제의함
 - 더불어, 양국 의회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국 간 의회 고위층 교류 유지 △ 상임위·친선협화·의원간 교류 활성화 △ 빈곤감소, 농어촌 지역 발전, 농업 진흥 등에 관한 경험 공유 △투자·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법적·제도적 환경 조성 △다자간 틀에서 상대국의 핵심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고려한 협조 강화 등을 제안함
- 에모말리 의장은 타·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전면적 전략동반자 관계 발전에 관한 양국 정상 간 전략적 리더십 역할을 높이 평가함. 또한 일대일로 공동구축을 지지하며 경제·인문·지자체·안보·방역 등 분야에서의 협력성고를 언급함
 - 또한, 타지키스탄 의회와 중국 전인대간 친선교류를 강화하여 양국관계를 포함한 전방위적 협력 강화에 양국 의회가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함

3) 일본

□ 일본 의회, 신약 및 신규백신 '긴급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약기법」 일부개정법을 성립(NIKKEI, 5. 13.)

- 신약 및 신규백신의 '긴급승인' 제도를 창설하는 「의약품·의료기기법[약칭 '약기법'(薬機法)] 일부개정법률안」*이 5. 13.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성립함
 - ※ 정식명칭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임
 - 이번엔 신설되는 긴급승인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시 외국 보건당국의 판단과 별개로 일본산 신약 및 신규백신을 신속히 승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5월 중에 시행될 예정
 - 구체적으로는 감염병 등으로 인한 건강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급히 필요한 약이나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하되 대체 수단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임상시험 도중에도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모이면 사용을 인정하게 됨. 다만, 긴급승인은 2년 정도 한시적으로 활용하고, 그 효과가 확인되지 못할 경우 취소됨

- 이번 긴급승인 제도가 적용되는 제1호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시오노기 제약(塩野義製薬)*이 개발하고 있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임. 시오노기 제약은 지난 2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제조판매 승인을 신청한 상태이며, 전염력을 가진 바이러스의 감소 및 기침·인후통과 같은 일부 증상의 개선을 확인했으나 사전에 당초 목표로 정한 효과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 시오노기 제약은 감염증, 정신·신경질환에 전문성이 있는 회사로, 일본의 대형 제약회사임 (2022. 5. 17. 현재 시가총액 2조 1,892억 4백만 엔(약 21조 4,835억 원))

- 한편, 긴급승인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신규 의약품 심사의 절차는 크게 변하지 않을 예정이며, 기업의 신청에 근거해 후생노동성 소관의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PMDA,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가 심사한 후 후생노동성의 심의회가 최종적인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중의원, '어린이 가정청' 설립을 위한 관련 법안 의결(중의원 홈페이지/NIKKEI, 5. 17.)

- 일본 중의원은 5. 17. '어린이 가정청(こども家庭庁)'의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정책 관련 법안 3건*을 의결하여 참의원에 송부하였으며, 5. 18.부터 참의원 심의에 들어갈 예정
- ※ ① 「어린이 가정청 설치법안」(내각제출, こども家庭庁設置法案), ② 「어린이 가정청 설치법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내각제출, こども家庭庁設置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③ 「어린이 기본법안」[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의원 외 10명 제출, こども基本法案]
- 중의원에서 의결된 어린이 정책 관련 법안이 참의원 의결을 거쳐 성립되면 2023. 4.에 '어린이 가정청'*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맞추어 「어린이 기본법」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종래 일본에서는 어린이 정책에 관련된 부처들 사이의 조정이 어렵고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된다는 비판이 높았으나, 어린이 가정청의 설립으로 인력·정보 및 예산이 집중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입안 및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 새로 신설되는 '어린이 가정청'은 내각부의 외국(外局)으로서 총리 직할로 설치되어 전 부처에 대한 권고권이 부여되며, 현재 내각부 및 후생노동성에 있는 어린이 및 양육 관련 부서가 이관되고 300명 정도의 직원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유치원 및 보육원(어린이집)의 소관 부처를 통합하는 '유보 일원화(幼保一元化)'는 보류되었으며, 유치원 및 의무교육 분야는 문부과학성이 그대로 담당하게 됨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의 우려는 남아 있는 상황
- ※ 일본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 다니는 기관은 유치원, 보육원, 인정 어린이원(認定こども園)으로 나뉨. 유치원은 유아 교육기관으로 문부과학성이, 보육원은 아동 복지 시설로 후생노동성이, 유치원과 보육원의 중간 정도의 역할을 하는 어린이원은 총리 중심의 내각부가 관할
- 현재 후생노동성이 소관하는 보육원과 내각부가 소관하는 인정 어린이원은 새로 설립되는 어린이

가정청이 담당하게 됨. 다만 부처간 칸막이 폐해를 막기 위해 어린이 가정청이 문부과학성을 포함한 전 부처에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총리가 직접 좌장이 되는 '어린이 정책 추진회의'를 신설하여 국가 어린이 관련 정책의 큰 지침을 정할 예정으로 알려짐

※ 지금까지는 내각부,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등이 각각 심의회를 두고 있어 정책이 난립하거나 부처 간 반복적으로 조정하는 사례가 발생했음

- 또한, 정부로부터 독립된 제3자기관의 설치에 대해서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은 행정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어린이의 권리가 지켜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 및 권고하는 독립기관 형태의 '어린이 권리보호기관(子どもコミッショナー)*' 설치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전통적인 가족관을 중시하는 자민당 내 보수파 의원들은 제3자가 가정교육에 과도하게 관여하게 된다는 이유로 어린이 권리보호를 위한 독립기관 설치에 대해 반대하여 이번 법안에서는 도입이 보류되었음

※ 어린이 권리보호기관: 어린이에게는 선거권이 없어 스스로 권리나 불이익을 호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럽에서 30개국 이상이 도입하고 있음(영국에서는 어린이 권리보호기관의 권고로 어린이 취학 지원을 위한 급부금 제도가 확충되었고, 아일랜드에서는 학교 내 집단괴롭힘 문제가 개선되었다는 분석도 있음)

- 현재 해당 법률 시행 5년 후까지 정책실시 상황을 재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명시한 상태이며, 어린이 권리보호기관의 설치 문제는 장기검토 과제로 재부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

□ 일본 호소다 중의원 의장,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비판 수용 및 발언 자제 입장 표명 (NHK NEWS WEB, 5. 12.)

-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일본 중의원 의장의 연이은 선거구 개편 관련 발언에 대해 야당 측에서는 여야 합의사항 및 법률규정을 무시하는 태도라는 비판이 잇따랐음

- 호소다 의장은 지난 해 11월 취임 후 인구비례 원칙에 입각한 중의원 선거구 개편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여사를 표명하였으며, * 최근 5. 10. 1인당 월 100만 엔(약 981만 원)이 안 되는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을 조금 늘린다고 해도 벌 받을 일은 아니며 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좋은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민주주의에서는 가능한 많은 의원들이 활발하게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일본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인구 비례에 따른 중의원 선거구 개편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한 표의 가치가 2배 미만인 되도록 선거구의 정수를 10개씩 증감하는 개혁안(일명 '10증(増) 10감(減)')이 제시되어 있음. 이에 따라 호소다 의장의 지역구인 시마네현(島根県) 등 인구가 적은 지역에 불리한 상황임

- 마부치 스미오(馬淵澄夫) 입헌민주당 소속 국회대책위원장은 이러한 발언을 반복하는 것은 의장의 자질을 포함해 큰 문제이므로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비판했으며,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일본유신회 공동대표도 호소다 의장의 발언에 대해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잘못되었으며 오히려 반대로 10석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함. 또한,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일본공산당 위원장은 선거구 조정 문제는 의장이 논평할 사안이 아니라고 비판

- 이에 호소다 의장은 5. 12. 밤 각 당의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역구 선거구 조정에 대한 자신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발언을 자제하겠다고 밝힘
 - 각 당 대표 등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호소다 의장은 소란스럽게 해서 폐를 끼쳤다고 언급하였으며 그동안에는 국회의원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 왔지만, 의장으로서 발언하는 경우 각 방면에서 비판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입장 표명을 자제하기로 결심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짐

4) 러시아

□ 볼로딘 하원의장, 우크라이나 전범포로 교환 금지 제안(러시아 하원 홈페이지, 5. 17.)

- 5. 17. 개최된 하원 본회의에서 볼로딘(Вячеслав Володин) 하원의장은 우크라이나 특수작전에서 포로가 된 이들 중 아조프 연대 구성원은 나치 범죄자들로써 전범 재판에 회부될 수 있도록 일반 군인포로와 다르게 교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함
 - 러시아 당국은 부상당한 전쟁 포로들을 치료하고, 항복하거나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군과 당국은 러시아 전쟁 포로들을 잔인하게 대하고 고문하고 있다며, 이들은 일반 군인이 아닌 나치로써 간주해야 한다고 부연
 - 볼로딘 하원의장은 관련 위원회인 국방안보위원회에 의정서 초안 작성을 지시
- 볼로딘 하원의장 발언 이후 주가노프(Геннадий Зюганов) 공산당 대표, 슬루츠키(Леонид Слуцкий) 자민당 대표대리, 미로노프(Сергей Миронов) 공정러시아당 대표 등 야당 대표 모두가 동 제안을 지지하며, 우크라이나 특수작전의 정당성과 서방의 반러 정서에 대해 비판함

□ 마트비엔코 상원의장, 투르크메니스탄 방문(러시아 상원 홈페이지, 5. 13.)

- 마트비엔코(Валентина Матвиенко) 상원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원 대표단이 5. 11. ~ 13. 간 투르크메니스탄을 공식 방문함
- 방문 개요
 - 대표단 : 마트비엔코 상원의장, 카렐로바(Галина Карелова) 부의장, 코사초프(Константин Косачёв) 부의장, 카라신(Григорий Карасин) 외교위원장, 구메로바(Лилия Гумерова) 과학교육문화 위원회 위원장, 스바텐코(Инна Святенко) 사회정책위원장, 자바로프(Владимир Джабаров) 외교위원회 제1부위원장
 - 주요 일정 : 제1차 중앙아시아-러시아연방 의회간 포럼 참석 /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예방 / 투르크메니스탄 하원의장 면담 / 제1차 중앙아시아-러시아 여성대화 전체회의 참석
- 제1차 중앙아시아-러시아연방 의회간 포럼(5. 12.)
 -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대표단 참석

-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은 기초연설에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를 지정학적 대결의 장으로 여기지 않고, 전통적으로 지역 국가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역 내 통합 강화 경향을 환영한다고 언급
- 「중앙아시아-러시아연방 의회 포럼의 아쉬하바트 선언서」 채택 :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연방 입법기관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협력 방안 개발
- 양국 의회간 '5+1' 형식 정례화 제안
- 투르크메니스탄 상원 및 러시아 상원간 협정 체결
-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예방(5. 12.)
 -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은 대통령 취임 축하와 푸틴(Владимир Путин) 대통령의 안부 전달 및 러시아 공식방문을 요청
 - 양국 교역 강화 및 인도주의, 문화, 교육, 과학 분야에서의 협력 강조
 - 투르크메니스탄의 중립적 위상과 독립적인 외교 정책 높이 평가
- 투르크메니스탄 하원의장 면담(5.12)
 -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투르크메니스탄 하원의장 러시아 방문 공식 초청
 - 투르크메니스탄 하원의장은 초청을 수락하였고, 중립국 위치에서 정책 시행 언급
 -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의회간 포럼을 정례화해 '아쉬하바트 포맷'으로 지정해 준 데 대해 감사 표시, 아쉬하바트에 이 포럼의 상설사무국 설립 준비
- 제1차 중앙아시아-러시아 여성대화 전체회의 참석(5. 13.)
 - 카렐로바 상원부의장은 동 회의의 정례화 제안
 - 「중앙아시아-러시아 여성대화 선언서」채택 : 여성대화를 통해 여성의 창조적, 평화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개발
 - 「2022년 중앙아시아 여성대화 실천계획」 서명

5) 영국

□ 영국-유럽 의회파트너십회의 첫 회의(영국 의회 홈페이지, 5. 13.)

- 영-유럽 의회파트너십회의(PPA)는 5.12-13 브뤼셀에서 첫 회의를 가지고 에너지 협력강화 및 다면적인 영-유럽 관계수립 등에 대해 논의함
- ※ 동 회의는 브렉시트에 따른 2021년 1월 영-유럽 무역협력협정(TCA) 발효와 함께 설립되었으며, 런던 및 브뤼셀에서 연 2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양 의회 대표단이 영-유럽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는 포럼임
- 우크라이나에 대한 완전한 지지 및 연대를 표하고,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를 지지함

- 에너지 가격급등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빚어진 에너지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협력협정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다각적인 영-유럽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강조

6) 독일

□ 독일 연방의회, 1975년 에너지안보법 개정안 의결(독일 연방의회 홈페이지, 5. 12.)

- 5. 12. 독일 연방의회 제34차 본회의, 최근 우크라이나전쟁으로 독일에서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위기예방 및 관리 수단을 규정한 에너지안보법 개정안 의결
 - 에너지 분야 중요기반시설을 운영하는 회사가 지역 사회의 에너지 제공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구체적 위험이 있고, 에너지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는 경우 최대 6개월 범위 내 신탁 관리를 명령할 수 있음
 - 에너지안보를 확보할 다른 방법이 없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수용도 가능함. 다만, 연방정부는 수용을 실시하기 전에 연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 EU 규정 2017/1938(SoS 규정) 제13조에 규정된 에너지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독일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연결된 이웃 유럽연합 회원국과 이탈리아에 가스를 공급할 의무가 있음
 - 에너지 안보를 실현하고 위기조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함

□ 독일 연방의회, 2022년 조세감면법 개정안 의결(독일 연방의회 홈페이지, 5. 12.)

- 5. 12. 독일 연방의회 제34차 본회의,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감면 및 특별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세감면법 개정안 의결
 - 소득세에 대한 2022년 기본공제액 한도를 현행 9,984유로에서 10,347유로로 363유로를 인상하고, 2022. 1. 1.부터 소급해 적용
 - 2024. 1. 1.부터 시행 예정인 장거리통근자 통근수당 공제액을 km당 38센트로 인상하고, 2026년까지 한시적 적용
 - 아동 1명당 100유로 특별보조금을 지급하고, 납세자에 대해 300유로의 일회성 에너지 보조금(Energiepreispauschale, EPP)을 지급

II. 주요국 정세 브리핑

1) 미국

□ 미국 국민 77%,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우려에도 러시아 제재 지지(WP, 5. 17.)

- 美 몬머스(Monmouth) 대학이 지난 5. 5.부터 5. 9.까지 미국 전역에서 80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7%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러시아 제재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
 - 우크라이나 지원에 찬성하는 의견은 민주당 지지층이 88%로 공화당 지지층 77%보다 더 높았으며, 무소속은 70%로 나타났음. 다만 77%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지만 21%만이 미국이 러시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답변함. 또한 미국인 3명 중 2명(66%)은 러시아가 유럽 동맹국을 침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군 파병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결과에 대해 패트릭 머레이(Patrick Murray) 몬머스대 여론조사연구소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국내 경제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평가함
 - 한편,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두 달 전 46%에서 43%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부과한 제재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당별로 크게 엇갈렸는데, 공화당 지지자 중 12%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민주당 지지자는 78%가 잘 하고 있다고 답변함

□ 주우크라이나 키이우 미국대사관 업무 재개(The Hill, 5. 18.)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할 당시 안전 및 보안조치로 업무를 중단했던 키이우 주재 미국대사관*이 5. 18.(현지시간) 업무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관 철수 이후 약 3개월 만임
 - ※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10일 전인 지난 2. 14. 키이우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폐쇄하고 폴란드로 인력을 이동시킨 바 있음.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연달아 대사관 문을 다시 열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임시사무소에서 업무를 해오던 한국대사관도 이달 초 키이우로 일부 복귀한 상태임
 -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은 당시 안전을 위해 미국 대사관 직원을 재배치한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 정부 및 시민 사회에 대한 지원은 계속한다고 밝힌바 있으며,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수십억 달러의 군사적·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해왔음
 - 이번 업무 재개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지원이 있었음을 강조하며, 이는 미국대사관 직원들이 키이우로 돌아갈 날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고 밝히면서 대사관 업무 재개를 환영

□ 미국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前 행정부의 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등 쿠바와 관계 개선에 나설 듯(Reuters/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5. 16.)

- 5. 16. 美 로이터 통신은 미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前 행정부 시절 쿠바에 대한 송금·여행 규제를 완화하고 비자 처리를 대폭 늘리는 등 對쿠바정책을 수정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보도*

※ 2019년 트럼프 前 행정부는 대표적인 반미국가인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의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목표로 해당국가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작한 바 있음

- 이에 앞서 美 백악관은 바이든 정부 취임 직후인 작년 1. 28. 쿠바에 대한 금수조치를 강화하고 쿠바를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복귀시킨 전임 정부의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정책 변경 의지를 시사한 바 있음. 이후 대중국 견제 속 코로나19 대응과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뒤로 미뤄졌던 쿠바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1년 4개월 만에 마친 것임

- 해당 재검토 내용에는 우선 분기당 1,000 달러(약 127만 원)로 제한했던 이민자 가족 송금 한도 자체를 해제하고, 기부 송금도 허가하는 한편, 여행 제한 완화와 비자 신속 발급 서비스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기업·시민의 사업·거래를 금지한 쿠바 정부 및 군부 제휴 기업 관련 국무부 지정 리스트는 그대로 유지할 예정*

※ 이에 대해 미국 당국자는 쿠바 국민에게는 송금이 더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쿠바 정부 등에 대해서는 풍요롭게 하진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

- 특히, 가장 눈에 띄는 조치로는 쿠바의 인터넷 접속을 용이하게 하고, 사회적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소액 대출(마이크로파이낸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쿠바 기업가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한 점임. 이는 쿠바 내 정보 접근 및 소통을 확대하고 중산층을 늘려 쿠바 사회를 한층 진보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또한, 이날 미 국무부는 쿠바 사람들이 전례 없는 인도적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고 미국의 정책은 쿠바 사람들이 압제와 경제적 고통에서 자유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에 계속 초점을 맞춰갈 것이라고 발표함

- 한편, 이번 완화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에 대해 미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책을 지지했던 남부 플로리다의 보수적인 쿠바계 미국인들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미 언론은 전망

-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Bob Menendez) 상원 외교관계위원장은 쿠바 정부가 지난해 시위 이후 많은 쿠바인에 대해 잔혹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쿠바 정부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언급함. 또한,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Marco Antonio Rubio) 상원의원도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 쿠바 동조자가 있다며 그 결과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前 행정부 시절의 실패한 정책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비판

□ 미국 버냉키 前 연준 의장,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 미흡과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 경고(NYT/CNBC, 5. 16.)

- 5. 16. 벤 버냉키 前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 의장이 미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제롬 파월(Jerome Powell) 現 의장이 이끄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이 늦었다며 비판함. 이렇게 前 연준 의장이 現 의장을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
 - ※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40여 년래 가장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데, 3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무려 8.5%에 달했으며, 4월에도 8.3%를 기록했음. 무디스애널리틱스는 미국의 가계가 작년 같은 달보다 한 달에 341 달러(약 44만 원) 정도를 더 쓰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함
 - 버냉키 前 의장은 2006년부터 8년간 연준을 이끌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로, 인플레이션 억제 조치를 언제 취할 것인지는 매우 복잡한 문제지만 연준의 대응이 늦었으며, 명백한 실수라면서 연준 관계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언급. 또한, 파월 現 의장이 신중하게 대응한 이유 중 하나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가 2013년 '테이퍼 탠트럼'(Taper tantrum·긴축 발작)* 당시 연준 이사였다는 점을 덧붙임
 - ※ 테이퍼링(Tapering)은 금융시장에서 중앙은행이 양적완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간다는 의미인데, 테이퍼 탠트럼은 이러한 테이퍼링이 시장에 충격이 돼 투자자들이 갑작스럽게 자금을 회수함에 따라 신흥국 통화가치나 증시가 급락하는 형태로 발작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함. 이와 관련하여 2013년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연준의 채권매입 프로그램(양적완화) 종료로 처음 시사하면서 전세계 위험자산이 급락한 바 있음
 - 또한, 그는 미국 경제에 대한 양호한 시나리오에서도 경기둔화는 불가피하다며 향후 1~2년간 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은 약간 올라가는 한편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고공행진하는 시기인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
 - ※ 스테그플레이션은 '불경기(stagnation)'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거시경제학에서 고(高) 물가상승과 실직, 경기 후퇴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를 말함

□ 미국 코로나19 사망자수 100만 명 돌파(WSJ, 5. 17.)

-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5. 12.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공식 발표
 - 이는 2020. 1. 미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7개월 만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비극적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밝히면서 미국 정부기관들에 조기 계양을 지시함
 - 100만 명의 코로나19 사망자수는 미국 질병통제센터(CDC)가 기록 중인 사망 확인서(death certificate)를 통해 나온 수치로, 이에 따르면 사망 확인서 중 최소 90%가 코로나19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코로나19 사망자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사망자 대부분이 주로 65세 이상 노인층에 집중되었으며 특히 요양원의 노인들이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남. 또한 흑인과 히스패닉 등의 유색인종이 높은 사망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가 연령별, 인종별로 불균등한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음

- 코로나19 사망자수가 100만 명을 돌파한 이 날은 미국이 주도하는 두 번째 '코로나19 정상회의'*가 열린 날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으며 코로나19 대응이 전 세계의 최우선 순위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 ※ 미국과 독일 등이 화상회의로 주최한 제2차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가 5. 12. 개최되었으며,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취임 후 처음으로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함.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 정상 등이 참석해 백신 접종과 진단검사와 치료제 접근 확대, 보건안보 강화와 미래 재난 방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2) 중국

□ 한중 외교장관 화상 회담 개최(외교부 보도자료, 5. 16.)

- 박진 외교부장은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화상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하에 역내에서 공동의 가치와 이익에 기반한 외교를 전개해 나가고자 하며, 한중관계가 금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상호존중과 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하고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힘
 - 양 정상의 상호방문 포함 고위급 및 각 급간 교류·소통 강화, 경제·보건·기후변화·미세먼지 등 실질협력 심화,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2) 계기 문화·인적 교류 확대 통한 양 국민 간 상호 이해 및 유대 심화,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협력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긴밀한 협력을 하자고 언급
- 왕 부장은 한중은 영원한 이웃이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가 한 층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길 바라며, 이를 위해 양측 고위급 간 소통·조율, 호혜협력, 문화교류 및 국제·지역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힘
- 양측은 상호 방문을 포함하여 많은 전략적 소통을 갖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함

□ 중국, 상하이 6. 1. 봉쇄 해제 목표(新華網, 5. 16.)

- 상하이 시정부는 방역 통제가 단계적으로 효과를 거두며 신규 감염자가 급감함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이 없다는 전제 아래 6. 1.부터 중하순까지 3단계 방역 관리를 통해 정상적인 생산·생활 질서를 완전히 회복하겠다고 발표
 - 1단계로 5. 21.까지 신규 감염자 발생을 억제하면서 방어구역의 제한적인 이동과 개방 등 낮은 수준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2단계로 이달 말까지 통제구역과 관리통제구역 수를 줄여 봉쇄를 완화하며, 이어 6. 1.부터 중하순까지 엄격한 방역과 코로나19를 통제하는 범위 내에서 정상 생활을 완전 회복하는 3단계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힘

- ※ 상하이시는 주거 지역을 감염자 발생 현황에 따라 '통제구역', '관리통제구역', '방어구역' 3곳으로 분류해 관리
- ※ 5. 16. 격리소 및 통제구역을 제외한 주거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사회면 제로 코로나19' 사흘 연속 유지 및 일일 신규 감염자 수가 823명으로 5. 15. 938명에 이어 연속 1천 명 이하를 기록
- 5. 16.부터 상업 활동, 열차 운행, 상하이발 노선 운항을 점진적으로 재개하고, 5. 22.부터 시내버스와 전철 운행도 점차 정상화할 예정임

3) 일본

□ 일본 정부, 물가급등 긴급대책 추진을 위한 2조 7,009억 엔 규모의 추경안 각의 결정 (The Jiji Press, 5. 16./NHK NEWS WEB, 5. 17.)

- 일본 정부는 지난달 마련한 물가 급등 긴급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일반회계 총액 2조 7,009억 엔 (약 26조 5,050억 원) 규모인 2022회계연도 추경예산안을 각의(閣議) 결정함
 - 이번 추경안에는 유가 급등 대책으로 석유회사 보조금 등 1조 1,739억 엔, 예비비 적립 1조 5,200억 엔 등을 계상했으며 코로나19 대응 예비비의 사용처를 물가급등 대책으로도 확대하는 한편, 추경 재원은 전액 적자 국채 추가발행으로 조달할 예정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추경안을 이번 통상국회 내에 통과시켜 민생을 지켜내기 위한 만반의 대비를 다져 나가겠다고 조기 성립을 위한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국회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액의 예비비를 계상하고 있는 추경안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 여·야 간 정치적 쟁점이 될 전망
 -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재무대신은 예비비를 늘리는 것이 재정규율의 일탈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예비비 증액은 향후 재해 코로나19 재확산, 추가적인 물가 급등이라는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해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며,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그 적합성을 잘 조사해 재정규율 유지에 노력해 가겠다고 언급
- 한편, 일본 정부 및 여당은 추경안에 대해 5. 25. 국회 심의 시작, 5. 31.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7월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야당 측은 국회 심의를 통하여 추경안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입장
 - 7월에 예정된 참의원선거를 대비하여 자민당 등 여당은 추경안 심사로 인한 정치쟁점을 최대한 발생시키지 않으려는 입장인 반면,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추경 규모가 미흡하고 예비비 증액을 위한 추경도 문제라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입장
 - ※ 일본 정부 및 여당이 계획하는 일정은 5. 25. 중 참 양원 본회의에서 스즈키 재무상의 재정연설 및 각 당 대표 질문, 5. 26. ~ 5. 27. 양일간 중의원 예산 위원회 심의 5. 27. 중의원 본회의 의결 후, 5. 30. ~ 5. 31. 참의원 예산위원회 개최, 5. 31. 참의원 본회의 의결 및 추경예산 성립(현재 일본 의회 정기회 회기는 6. 15.에 종료할 예정이며 연장도 가능)

□ **일본 정부, 코로나19 백신 3회 접종한 한국→일본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 실시**
(The Jiji Press/연합뉴스, 5. 16., The Yomiuri Shimbun /연합뉴스, 5. 17.)

- 일본 외무성은 5. 17. 오전 0시부터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 코로나19 백신을 3회 접종하고 일본 도착 후 검역당국의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를 면제한다고 5. 16. 발표
 - 그 동안은 코로나19 백신을 3회 접종했더라도 격리 면제 없이 검역소 지정시설에서 3일간 대기가 필요했는데, 이번 발표로 해제된 것임. 또한, 코로나19 백신을 3회 접종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도착 후 7일 동안 숙소에서 격리해야 하지만, 입국 3일째 이후에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이를 후생노동성에 제출하면 격리가 해제됨
 - 일본 정부는 6월부터 단체여행객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현재 입국자 전원에게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검사를 출국 전 검사의 정확도가 높은 국가의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일부 면제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짐*
 - ※ 일본 정부는 일일 입국자 수 상한을 현행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상향할 계획이며, 입국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 입국자 전원에게 대한 검사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다만, 일본 정부는 출국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는 계속 하여 요구하고 있어 5. 17. 이후에도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출발 전 한 차례, 도착 직후 한 차례 등 최소 두 차례의 검사를 받아야 함
- 한편, 이번 격리면제 발표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관계 개선의 긍정적 흐름으로 평가하며, 일본 측의 사전 통보와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고 밝힘
 - 일본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 조치는 4월 말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이 일본 측에 제안한 바 있으며, 5월 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 차 방한했던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 및 일한의원원맹 소속 국회의원들도 한국 측과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짐
 - 다만, 코로나19 사태 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적용되던 무비자 입국(90일 이내)은 2020. 3.부터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 발급이 필요함. 이에 따라 이번 격리면제의 효과는 유학생, 주재원, 단기 출장자 등 비자를 받아서 일본에 입국하는 사람들이 누릴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양국 간 인적교류 수요 및 국내외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국가들과 사증 면제, 무사증 입국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일 양국은 코로나19 상황을 보며 인적 교류를 재활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다고 부연

□ 한국 외교부, 하야시 외무상 방한 중 ‘한국의 독도 인근 무허가 해양조사’를 보도한 일본 언론에 정당한 활동이라고 일축(The Sankei News/연합뉴스, 5. 17.)

- 한국 외교부는 한국의 국영기업이 독도 남방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무허가 해양조사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일본 산케이신문의 보도에 대하여 정당한 활동이었다고 일축함
 - 산케이신문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 차 한국에 방문한 시점(5. 9. ~ 5. 10.)에 독도 남쪽의 일본이 주장하는 EEZ 내에서 한국 국영기업의 위탁을 받은 노르웨이 선박의 조사선이 무허가 해양조사를 실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5. 17. 보도
 - 이러한 보도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 제기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으며, 해당 선박의 활동은 한국 EEZ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활동으로 해양 조사가 실시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을 덧붙임
 - ※ 한국과 일본은 동해 EEZ 경계를 확정하지 못해 서로 자국의 EEZ라고 주장하는 해역이 존재하는 상황



〈출처: 2016. 10. 12. 조선일보 기사 "동해 중간수역, 독도 영유권 훼손 위험"〉

- 한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일본 관방장관은 산케이신문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대해 해당 선박의 항행 정보를 접하고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해당 해역에서 즉시 행동의 목적 확인과 주의 환기를 하는 동시에 경계를 실시했다고 답변
 - 마쓰노 관방장관은 한국 측에는 즉시 외교 경로를 통해 해당 선박의 항행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였으며, 만약 일본 EEZ에서 조사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전달했다고 밝히면서도 해당 선박에 의한 일본 EEZ 내 해양 조사의 실시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임
 - 한편, 5. 17. 열린 자민당 외교부(外交部) 회합에 출석한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교부 회장 등 자민당 의원 중 상당수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한국 측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4) 러시아

□ CSTO(집단안보조약기구) 정상회의 개최(러시아 대통령실/주요언론, 5. 16.)

- 5. 16. 모스크바에서 푸틴(Владимир Путин) 대통령 등 6개 CSTO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CSTO 정상회의가 개최됨.
- 회의 개요
 - 금년은 1992. 5. 15. 집단안보조약이 체결 30주년 및 2002년 국제기구인 CSTO(집단안보조약기구) 창설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30/20주년을 각각 기념하여 이번 정상회의 개최
 - ※ 회의 결과로 「집단안보조약 체결 30주년 및 집단안보조약기구 창설 20주년 기념 성명」 채택
 - 참석자: 푸틴 대통령 등 6개 CSTO 회원국 정상들과 Stanislav Zas CSTO사무총장 (총 7명)
 - 올해 CSTO 의장국은 순번상(국명 영어알파벳 순) 아르메니아로서, 의장국 아르메니아 총리가 회의를 주재하는 형식으로 진행
 - ※ 회의의장(아르메니아 총리)의 제안으로 금번 회의는 모스크바에서 개최
 - 주요 의제 : CSTO 내 협력 사안, 현 국제문제와 지역문제, 집단안보체제 개선 조치
 - 특기사항 : 코로나 이후 첫 대면회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 24.) 이후 첫 CSTO 정상회의

〈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

- 1992. 5. 15. 집단안전보장조약(Collective Security Treaty) 체결
 - 당사국 : 러시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이상 1992년 서명), 벨라루스(1993), 아제르바이잔(1993), 조지아(1993)
- 2002년 집단안전보장기구 설립에 관한 조약 체결
 - 회원국(6개국) :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는 중도 탈퇴)
 - 옵서버(2개국) : 아프가니스탄, 세르비아

- 푸틴 대통령 발언 요지
 - CSTO의 주요 개선 과제 : CSTO 군 현대화, 회원국 군 간의 상호 운용성 향상, 군사기관과 정보기관간 협력 강화 등 언급
 - 핀란드·스웨덴의 NATO 가입만으로 러시아에 직접적인 위협 없으나, 해당국가 영토에 추가적인 군사시설이 배치될 경우 러시아의 대응이 분명히 있을 것이며, NATO가 유럽-대서양 지역을 넘어서 여러 국제현안에 개입하므로 CSTO 차원의 주의를 요구된다고 언급
- 「집단안보조약 체결 30주년 및 집단안보조약기구 창설 20주년 기념 성명」요지
 - CSTO의 활동 범위 확대 : 외교정책 조정, 군사협력, 위기대응, 평화유지활동, 의회간 협력, 국제테러리즘과 극단주의에 대응, 정보안보·생물학적 안보 확보, 조직범죄 대처, 불법무기거

래 문제 대응, 불법이주 대응 등

- 2022. 1월 카자흐스탄 내 CSTO 평화유지군 작전을 통해 CSTO군이 회원국 안보 확보 임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
- UN, 국제 및 지역 기구, 국가들과의 협력 심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정세와 CSTO 회원국들의 국경 상황에 우려, 국경 안보 확보 의지 확인
- 국제법 규범과 원칙의 선택적 적용, 국제적 협상 방식의 무시, 주권국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 국내문제 간섭, 유엔안보리의 권능을 위반한 일방적 제재조치, 이중기준에 대한 우려 표명
- 유라시아 지역의 항구적 평화 보장을 확보하는 CSTO의 책임을 인식하고, 유라시아대륙에서의 긴장완화 중요성을 강조하며, NATO와 실질적 협력을 구축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재확인
- 나치즘 미화와 네오나치즘, 인종주의, 외국인혐오증의 유포를 배격

○ 정상회담 결과 관련 전문가 분석 요지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적극 지지하는 단합된 공동성명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회원국들이 어느 측에 서 있는지 결정하도록 압박했으며 어떠한 회원국들도 CSTO를 탈퇴하지 않고 이번 회의에 불참하지 않았다는 것, CSTO에 남아 있는 것 자체가 러시아의 동맹국이라는 것을 뜻함
-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에 CSTO 회원국을 동원할 경우 러시아 군사 전력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부정적 신호가 될 것이고, 러시아가 CSTO에서 군사안보를 제공하는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이들이 CSTO에 남아있을 유인이 적어지기 때문에 CSTO 국가를 우크라이나 사태에 동원하지는 않을 것임
- CSTO 회원국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으로서 이들 국가의 주요 우려는 서방의 2차 제재 대상이 되는 것임. CSTO 회원국들은 서방의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 러시아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함
- 러시아로서는 현재 제재대상이 아닌 회원국들을 비공식 수입 및 투자의 중간 다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이들이 추가 제재대상국으로 지정될 경우 벨라루스와 같이 러시아편으로 더욱 끌어당길 수 있을 것인바, 서방으로서도 CSTO 회원국들 중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제외한 여타 4개국에 대한 제재부과 여부를 성급히 결정하지는 않을 것임

□ **러시아 정부, 수출 금지 및 제한조치 관련 정부령 2차 개정(러시아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5. 11.)**

- 러시아 정부는 2022. 5. 11.자 정부령 제850호(5. 12.자 시행)를 통해 금년말까지 러시아로 수입된 외국산 물품에 대한 반출 금지·제한 조치(러시아 정부령 제311호·제312호)를 일부 완화(반출 금지·제한 품목 축소)하고, 비우호국 대상으로 특정 목재와 금속 폐기물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제313호)의 적용 범위를 확대(수출금지 대상자 추가)하는 방향으로 기존 정부령

(제311~313호)을 개정함

- 기존 러시아 정부령(제311호~제313호, 제390호) 제·개정 경과
 - 제311호(2022. 3. 9.) : 러시아로 수입된 특정 외국산 물품(농기계·차량·공산품·통신장비·광업장비 및 그 부품·소재 등 200여개 이상 품목)에 대해 금년말까지 유라시아경제연합(EA EU) 회원국·압하지야·남오세티아 이외의 국가로 수출(반출) 금지
 - 제312호(2022. 3. 9.) : 러시아로 수입된 특정 외국산 물품을 EAEU 회원국 등에 수출 시에 러시아 정부의 수출 승인을 받도록 함
 - 제313호(2022. 3. 9.) : 러시아산 특정 목재 품목에 대해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한국 포함 48개 비우호국가로 수출을 금지
 - 제390호(2022. 3. 17.) : 비우호국가로의 한시적 수출 금지 대상에 러시아산 내식강·합금강·팅스텐의 폐기물과 스크랩 품목 추가
- 정부령 주요 개정 내용
 - 반출 금지·제한 품목의 축소 : 가전 및 소비재, 무선/전자, 선박, 공구, 도로건설장비, 플라스틱·고무 제품, 유리용기, 자동차·철도 엔지니어링 제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 한시적 수출금지 조치 및 수출제한 조치 대상 물품 목록에서 제외
 - 수출 금지 대상 범위 추가 : 러시아산 특정 목재 및 금속 폐기물 품목에 대한 한시적 수출 금지 조치를 비우호국가뿐만 아니라 비우호국가에 등록된 자와 체결된 무역 계약에 의한 경우 또는 비우호국가에 등록된 신용기관의 결제에 의한 경우에는 비우호국가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도 적용

5) 기타

□ 베트남·인도네시아, 입국자 출발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VnExpress, 5. 13./Reuters, 5. 18.)

- 5. 13. 팜 밍 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5. 15.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출발 전 코로나19 검사를 중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함
 - 쩡 총리는 보건부에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고 적합한 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외교부에는 해외의 기관들이 베트남에 입국하길 원하는 현지 국민들에게 변경된 방역 지침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함
- 5. 17.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화상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잘 통제되고 있으므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며, 백신 접종 완료자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함. 이번 조치는 5. 18.부터 시행될 예정임
 - ※ 인도네시아는 4월 초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으로 입국 후 체온 검사만 통과하면 PCR 검사를

면제하고 있음

-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최근 각 국가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이러한 지침을 시행함.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싱가포르, 태국은 이미 출발 전 코로나19 검사 지침을 폐지한 바 있음
- ※ 5. 16. 기준 베트남 일일 확진자 수: 1,550명, 7일 평균 확진자 수: 2,832명 / 인도네시아 일일 확진자 수: 182명, 7일 평균 확진자 수: 325명

□ 호주, 5. 21. 총선 사전투표 실시(The Guardian/Reuters, 5. 14.)

- 5. 21. 총선을 앞두고 호주 전국 500개 사전투표소에서 5. 9.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음
- ※ 이번 총선에서는 하원의원 150명 전원, 상원의원 76명 중 40명 교체 예정
- 5. 9. ~ 13.간 유권자 등록을 마친 호주 시민 1,700만 명 가운데 120만 명(7%) 이상이 사전투표에 참여함
- 올해 사전투표 비율은 코로나19 우려 등으로 최고 50%에 이를 것이라 예상됨
- ※ 호주 역대 총선 사전투표 비율: 2013년-26.4%, 2016년-31%, 2019년-40%
-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가 이끄는 중도보수 성향의 자유당-국민당 연정은 최근 일련의 여론조사에서 중도좌파 성향 노동당에 밀리는 양상을 보임

□ 아랍에미리트 칼리파 대통령 서거, 무함마드 왕세제 차기 대통령 선출(Al Jazeera, 5. 13./외교부 보도자료, 5. 18.)

-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Khalifa bin Zayed Al Nahyan)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겸 아부다비 통치자가 5. 13., 향년 73세로 별세. UAE는 40일간의 추모기간 선포
- ※ 아랍에미리트의 정부 형태는 7개 에미리트로 구성된 대통령 중심 연방제
-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Zayed bin Sultan Al Nahyan) 초대 대통령의 장남이었던 칼리파 대통령은 2004년 자이드 대통령 사망 이후 아부다비 통치자 및 대통령직 승계
- 2009년 대통령직 연임에 성공. 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5년이나 지속적인 연임에 의한 사실상 종신제 형태
- 2011년 아랍의 봄 이래 중동정세 격변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국내 불안 상황 없이 안정적 정세를 유지했다는 평가
- 헌법에 따라 부통령 겸 두바이 통치자인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Mohammed bin Rashid Al Maktom)이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나, 5. 14. UAE 연방 최고위원회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Mohammed bin Zayed Al Nahyan) 왕세제가 만장일치로 차기 대통령에 선출
- 2014년 칼리파 대통령의 와병으로 인해 모하메드 당시 왕세제가 실질적 통치자로서의 활동을 개시. 이후에도 알 막툼 총리(부통령 겸 두바이 통치자)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등 안정적 연합 체제 유지

※ 법안 발의, 연방 예산 의결 등에서도 7개 에미리트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연방평의회도 에미리트별 인구 비율에 따라 구성

- 윤석열 대통령은 장제원 대통령 특사를 단장으로 하는 조문사절단을 UAE에 파견해 신임 대통령 등 유족을 만나 윤 대통령과 우리 국민의 애도와 조의를 전달함
 -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총리,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미국 부통령 및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국무부 장관, 이츠하크 헤르초그(Yitzhak Herzog) 이스라엘 대통령 등 각국 지도자들 UAE 조문

□ 칠레, 새 헌법 초안 공개(BBC mundo/한겨레 등, 5. 17.)

- 칠레 제헌회의는 지난 5. 26. 원주민 권리, 성평등 및 기후대응을 담은 새 헌법 초안을 공개함
 - 칠레의 헌법 개정은 2019. 10. 칠레 내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로 비롯되었는데, 당시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되어 교육, 의료, 연금 등 사회 전반적 불평등에 항의하는 시위로 확산된 바 있음. 이 와중에 1980년 제정된 피노체트 헌법이 칠레의 사회 불평등과 부조리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새 헌법이 추진된 것임
 - 새 헌법 초안은 무상 고등교육 등 교육권 확대, 정부 부처의 성 평등 강화, 의료·주거권과 환경권 확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부의 책임 및 양원제인 의회를 단원제로 바꾸는 정치 개혁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해당 헌법 초안은 오는 9. 4. 치러지는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나 동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임. 동 개헌안은 당초 국민의 80% 이상의 지지로 추진되었으나 최근 그 열기가 식어 30~40%의 지지에 그치고 있으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주의에 치우쳐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음

□ 영국 외교장관, 북아일랜드 의정서 개정 법안 추진 발표(BBC, 5. 17.)

- 5. 17. 리즈 트러스(Liz Truss) 외교장관은 하원 본회의에서 북아일랜드 의정서(Northern Ireland Protocol)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 그레이트 브리튼 섬과 북아일랜드 간 이동 상품에 대해 신속심사(녹색) 및 일반심사(적색)로 구분한 Two-Track 도입
 - 영국 내에서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에 대한 제출서류 간소화
 - 북아일랜드 내 판매목적으로 영국 상품기준에 맞게 제작된 상품에 대한 규제장벽 철폐
 - 북아일랜드 내 판매 상품에 대해 각 사업체에서 영국 또는 유럽연합의 상품기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중규제제도 도입
 - 북아일랜드 의정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
- ※ 북아일랜드 의정서는 유럽연합 탈퇴 합의 중 일부로, 남-북 아일랜드 간 물리적 국경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에 한해 북아일랜드를 유럽연합 단일시장에 잔류하도록 정하는 내용

- 트러스 장관은 북아일랜드의 불안정한 정치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국제법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
-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 제프리 도널드슨(Jeffrey Donaldson) 대표는 동 입법안을 환영하고, 법안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북아일랜드 연립정부 구성에 점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발표
 - 5. 5. 북아일랜드 지방선거에서 제2정당으로 밀려난 민주연합당은 북아일랜드 의정서를 재협상하기 전까지 제1부 장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하며 북아일랜드 행정부 구성을 방해하고 있음
 - ※ 1998 북아일랜드법(Northern Ireland Act 1998)은 친영국주의 진영과 민족주의 진영에서 각각 제1장관 및 제1부 장관을 임명하여 연립정부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음
- 5. 17. 마로시 세프코비치(Maros Sefcovic)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의정서 체계 내에서 공동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영국 정부와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영국이 동 법안을 고집하는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힘
- 보수당 내부에서도 사이먼 호어(Simon Hoare) 북아일랜드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동 법안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내용이며, 유럽과의 통상전쟁을 야기할 것이라는 회의적 입장

□ 영국, 스웨덴-핀란드와 상호안보협약 체결(Reuters, 5. 11.)

- 5.11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총리는 유럽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스웨덴 및 핀란드와 각각 상호안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당사국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 한해 군사적 지원을 약속
 - 당사국 간 정보교류 및 합동군사훈련, 작전 및 파병 강화
- 존슨 총리는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각국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며 개별 주권국가는 두려움, 강요, 보복위협 없이 북대평양조약기구(NATO)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 5.16 리즈 트러스(Liz Truss) 외교장관은 스웨덴 및 핀란드 양국의 국민 다수가 NATO 가입을 원한다면, 영국은 가입절차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밝힘
- 핀란드 사울리 니니스퇴(Sauli Niinisto) 대통령은 현재 유럽안보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NATO 가입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밝힘
- 5.18 스웨덴과 핀란드는 NATO에 정식으로 가입을 신청했으며,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은 환영의사를 밝힌바 있음

□ 마크롱 대통령, 엘리자베스 보른 신임 총리 지명(프랑스 대통령궁, 5. 16.)

- 마크롱 대통령은 5. 16. 장 카스텍스(Jean Castex)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고 엘리자베스 보른(Elisabeth Borne) 노동부 장관을 신임 총리로 지명한 후 새 정부 구성을 위임함
 - 보른 총리는 마크롱 1기 정부 시절, 교통부장관·환경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으로 재직해온바 있으며,

과거 사회당 리오넬 조스팽(Lionnel Jospin) 총리 및 프랑수와 올랑드(François Hollande) 대통령 정부에서 근무한 이력으로 좌파 기술 관료로 평가받음

- 보른 총리는 프랑수와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 대통령이 에디트 크레송(Edith Cresson) 총리(재임기간 1991. 5. 15. ~ 1992. 4. 2.)를 지명한 후 30년 만에 지명된 여성 총리임

○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하원 총선거(577석)를 앞두고 신임 총리를 지명한 배경을 두고 각 정파는 다른 의견을 표명하고 있음

- 마크롱 대통령은 생태, 보건, 교육, 완전고용, 민주주의의 재발견, 유럽 및 안보를 위하여 새 총리와 함께 새 정부를 구성하여 쉽 없이 일을 할 것이라고 천명함
- 이에 대해 이번 대선에 출마한 극우 에릭 제무르(Eric Zemmour) 전 후보는 좌파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알뜰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였으며 극좌 장-뤽 멜랑송(Jean-Luc Melenchon) 전 후보는 보른 총리는 좌파와는 무관한 마크롱주의자에 불과하다고 함

□ 마크롱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회담(프랑스 대통령궁, 5. 17.)

- 마크롱 대통령은 5. 17.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통해 마리우폴 지역을 포함한 상세한 현황과 우크라이나의 요청 사항을 청취함
- 마크롱 대통령은 방위물자, 연료, 인도적 지원 물자, 경제 및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대한 단호한 지원 방침을 재확인하였으며,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관한 문의에 대해서도 6월 유럽이사회에서 검토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

□ 독일 집권여당 신호등연정, 의석수 대폭 축소 선거법 개정안 제안(FAZ, 5. 18.)

- 연방의회 선거법개정위원회 중 신호등연정 3당(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 대표, 초과 의석을 폐지해 의석수를 대폭 축소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제안
 - 현행 독일 연방의회 의석수 배분은 지역구의원 우선원칙에 따라 지역구 당선자(1투표) 수가 정당명부비례대표(2투표) 득표율로 분배된 의원 수 보다 많을 경우 초과 의석(Überhangmandate)을 인정하고, 초과 의석 인정에 따른 정당명부비례대표(2투표) 득표비율과 정당별 의석수 불일치를 보정하기 위해 균형의석(Ausgleichsmandate)을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의석수가 연쇄적으로 확대되어 현행 연방의회는 736석으로 법정의석수 598석보다 138석이 초과되어 있음
 - 연방의회 선거법개정위원회 중 신호등연정 3당(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 대표는 현행 초과 의석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과도한 의석수 증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초과 의석 제도를 폐지하고 법정의석수 598석만을 유지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제안

교섭단체	의석	초과의석	균형의석	계
기민/기사연합	기독교민주당	12	18	30
	기독교사회당	11		11
사회민주당		10	26	36
녹색당		-	24	24
자유민주당		-	7	7
독일대안당		1	13	14
좌파당		-	7	7
계		34	104	138

1949-2021 독일 연방의회 의석 수 추이



III. 의회 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동향

1) UN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5월 기후변화 각료급 회의 개최(외교부 보도자료, 5. 14.)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 공동 의장단(영국, 이집트) 및 덴마크 정부는 제 27차 COP에 앞서 국제사회의 기후공약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5월 기후변화 각료급회의(May Ministerial)」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공동으로 개최(5. 12. ~ 13.)

- 금번 회의는 작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COP 이후 처음으로 대면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주도 다자 국제회의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싱가포르 등 40여 개국 참석

○ 주요 논의 내용

-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
-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최소화
- 온실가스 감축 및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과 각국의 기후 행동 강화
 - * 2100년까지 전 세계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
- 기후재원 동원 방안 모색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 기후변화 대응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재확인
-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 감소를 위한 선진국들의 재정 및 기술지원, 역량배양 강화

-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우리 신정부의 기후정책과 비전을 소개하며, 우리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지속 이행할 것을 약속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상향된 NDC를 유엔에 제출(2021. 12.)

〈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 〉

- 개요 : 1992. 6.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 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UN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 *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에 따라 각자의 능력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약속
- 회의 : 총회는 5개 대륙(아메리카, 서유럽,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동유럽)에서 순회하며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협약 부속국을 대상으로 감축목표와 개조국에 대한 재정지원과 같은 핵심쟁점을 논의
 - ※ 2021. 11. 제26차 총회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었으며, 2022. 11.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제27차 COP 개최 예정

2) OECD

□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HCQO) 워킹그룹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5. 16.)

- OECD는 회원국 간 보건의료 성과 제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HCQO) 워킹그룹*을 프랑스 파리에서 대면으로 개최(5. 12. ~ 5. 13.)
 - ※ 주요 참석자 :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연구소장 등 OECD 회원국 보건의료 관계자
 - * 보건의료 질과 성과(Health Care Quality and Outcomes, HCQO) 워킹그룹 : 보건 지표 개발, 수집 및 비교를 통해 의료의 질 측면에서 OECD 회원국의 보건의료 성과를 비교하는 워킹그룹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매년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음
- 주요 논의사항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보건의료 체계의 회복력
 - 보건의료 질 제고를 위한 향후 과제
 - 의약품 안전 등 환자 안전의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연구소장은 OECD 사무국 측 요청으로 백신접종 이력 제공, 개인 투약 이력 확인 등 한국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시스템을 활용한 환자 안전 개선 전략을 소개하고, 한국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한 국제적 모범 사례로 인정받은 데 사의를 표한다고 밝힘

3) NATO

□ 핀란드·스웨덴, NATO 가입 본격 돌입(Reuters, 5. 16./CNN, 5. 16.)

- NATO 외무장관들은 베를린에서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 신청 가능성에 관하여 논의(5. 15.)
- 핀란드 정부는 NATO 가입 신청 의사를 밝혔으며(5. 15.), 스웨덴 정부도 핀란드와 함께 NATO 가입을 신청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5. 16.)
 - 스톨텐베르그(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은 NATO 외교부 장관 회의에서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임을 발표
 - ※ NATO 가입 승인 절차는 통상적으로 1년 정도 소요
 - 군사적 비동맹주의 정책에 따라 중립을 지키던 핀란드와 스웨덴의 NATO 가입 선언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고려한 두 국가의 안보 정책 변화를 의미

* 의회외교활동 현황

1) 면담

□ 인도네시아 상원 법제위원회 대표단, 한-인도네시아 의원친선협회 면담(5. 13.)



- 일시 및 장소: 5. 13.(금) 10:30, 국회접견실
- 참석자:
 - (아측) 김기현 한-인도네시아 의원친선협회장, 박성민 한-인도네시아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 (상대측) 에니 수마르니(Eni Sumarni) 상원 법제위원회 부위원장 등 11인
- 면담 경위: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 논의 및 교류 강화
- 주요 면담 내용
 - 김기현 한-인도네시아 의원친선협회장은 내년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의 유대관계가 더 깊어지길 바란다고 말하며,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이 경제, 문화, 예술,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양국 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함. 또한, 2030년 부산광역시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인도네시아측의 지원을 부탁함
 - 에니 수마르니 부위원장은 한-인도네시아 의원친선협회의 환대에 감사하다고 답하며,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함. 또한, 우리나라 디지털정부 법안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실정에 맞는 디지털정부 법안을 구현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언급함

□ 베르나드 슈라이넬 주한슬로베니아대사대리, 김민기 한-슬로베니아 의원친선협회장
면담(5. 13.)



- 일시 및 장소 : 5. 13.(금) 15:00, 민주당 사무총장실
- 참석자
 - 우리측 : 김민기 한-슬로베니아 의원친선협회장
 - 상대측 : 베르나드 슈라이넬(Bernard Šrajner) 주한슬로베니아대사대리
- 면담 경위 : 주한슬로베니아대사관 개관 및 대사 부임 예정에 따른 친선협회장 면담
- 주요 면담 내용
 - 슈라이넬 대사대리는 주한슬로베니아대사관 개관이 한-슬로베니아 수교 30주년인 올해 11월로 예정되어 있음을 알리며, 대사관 개관에 한-슬로베니아 의원친선협회의 많은 관심을 부탁함. 또한 4. 24. 슬로베니아 총선거를 거쳐 5. 13. 의회가 개원하였고, 슬로베니아-한국 의원친선협회가 발족 예정임을 전달함
 - 김민기 한-슬로베니아 의원친선협회 회장은 이에 주한슬로베니아대사관 개관을 환영하며, 대사관 개관 준비 진척상황에 대하여 문의함. 또한 개관 관련 애로사항이 있으면 친선협회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함
 - 슈라이넬 대사대리는 한-슬로베니아간 교류 및 슬로베니아 역사에 관하여 설명함. 특히 슬로베니아 주권운동이 유럽 각국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언급하며, 이러한 역사가 한국의 주변국과의 역사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설명함
 - 김민기 회장은 슬로베니아사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한-슬로베니아 협력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를 함. 또한 앞으로도 양국의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함

□ 알 부카이 요르단-한 의원친선협회장, 김희국 한-요르단 의원친선협회장 면담(5. 17.)



- 일시 및 장소 : 5. 17.(화) 13:30, 김희국의원실
- 면담 경위 : 2022년 외교부 주요인사 전략적 초청사업으로 방한
- 주요 면담 내용
 - 김희국 한-요르단 의원친선협회장은 올해는 양국 수교 60주년으로 양국은 1962년 수교 이래 우방국으로서 긴밀하게 협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함. 또한, 요르단은 지정학적 이점과 비즈니스 우호정책으로 우리 기업의 레반트 지역 거점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양국 경제협력 확대에 더욱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 알 부카이 요르단-한 의원친선협회장은 한국 기업들이 요르단에 진출한 것은 양국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 측면에서도 매우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희망함. 또한, 한국정부에서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보내준 교육, 의료 등 인도적 지원에도 감사를 표함
 - 주한요르단대사는 그간 양국의 고위급 교류가 양자 관계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도 양국 정부-의회 간 교류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해외의회 포커스 (제89호)

주요내용 요약

미 국

- 미국 하원, 가스값 폭리 단속법 통과
 - 미국 내 가솔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연일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동 법안은 찬성 217: 반대 207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팽팽한 표 대결 끝에 승인되어 상원으로 넘어갔으나 공화당의 지지 없이는 통과가 힘든 상황으로 상원에서 진통이 예상됨
- 미국 언론, 바이든 대통령 방한계기 반도체 협력 및 북한에 대한 균형적 접근 입장을 보였다고 평가
 - 미국 언론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5. 20. ~ 24.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면서 세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찾고 있는 공통점 중의 하나가 '반도체'임을 강조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굳건하면서도 균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평가
- 미국 상원, 북한 등 적국에 미군정보 판매금지 법안 발의
- 미국 바이든 대통령,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군사개입 발언 파장

중 국

- 중국-그리스 의회 정상 간 화상회의 개최
- 중국, 한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해 코로나19 방역기준 완화
- 중국 왕이 외교부장, 태평양 섬나라 8개국 방문 발표

일 본

- 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하여 초당파 의원입법으로 추진된 제정법률안 성립
- 호소다 일본 중의원 의장이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야당이 해명을 요구
- 한미정상회담에서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인
-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미일정상회담 실시 후 공동성명 발표

러시아

- 러시아 하원, 철수 외국 기업에 대한 외부관리제도 도입 법안 심사
- 러시아 「발트해국가 이사회」 탈퇴
- 러시아 정부, 외환규제 완화 조치

기 타

- 인도네시아, 5. 23.부터 팜유 수출 재개
- 태국 방콕, 9년 만에 시장 선거에서 현 총리 반대파 당선
- 호주 총선 결과, 앤서니 알바니즈 노동당 대표 총리 당선
- 멕시코시티에 '서울공원' 조성
- 영국 총리실 파티게이트 관련 조사보고서 발표
- 보른 프랑스 총리, 새 내각 구성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 제78차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개최
-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 개최

의회외교활동 현황

- 영국 하원 DCMS 상임위원회 대표단,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면담
- 다니엘 볼벤 주한스웨덴대사, 민홍철 국방위원장 면담
- 아키바 토르 주한이스라엘대사, 이원욱 과방위원장 면담
-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보좌진, 이상민 한-EU 의회외교포럼 회장 면담

CONTENTS

I. 해외의회 주요 이슈

1) 미국

- 미국 하원, 가스값 폭리 단속법 통과 1
- 미국 상원, 북한 등 적국에 미군정보 판매금지 법안 발의 1
- 미국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2

2) 중국

- 중국-그리스 의회 정상 간 화상회의 개최 3

3) 일본

- 일본, 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하여 초당파 의원입법으로 추진된
제정법률안 성립 3
- 일본 중의원 헌법심사회, 평화헌법 제9조의 자위권의 범위에 대하여 정당별로 의견 교환
..... 4
- 일본, 호소다 중의원 의장이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야당이 해명을 요구 5

4) 러시아

- 러시아 상원, 청년의원 포럼 개최 6
- 러시아 하원, 철수 외국 기업에 대한 외부관리제도 도입 법안 심사 7

5) 영국

- 영국하원 윤리위원회, 의원행동강령 개정 권고 7

6) 독일

- 독일 연방의회, 월 9유로 교통권 시행을 위한 제7차 지역화법 개정법안 의결 8
- 독일 연방의회, 제11차 사회법전 제2권 개정법안 의결 8
- 독일 연방의회,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재시행법안 의결 9

II. 주요국 정세 브리핑

1) 미국

- 미국 언론, 바이든 대통령 방한계기 반도체 협력 및 북한에 대한 균형적 접근 입장을 보였다고 평가 10
- 미국 바이든 대통령,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군사개입 발언 파장 11
- 미국 바이든 대통령, 訪日 직후 텍사스 총기 참사 관련 대국민 연설 11
- 미국, 분유대란에 군용기를 동원하여 독일에서 특수분유 긴급공수 12

2) 중국

- 중국, 한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해 코로나19 방역기준 완화 13
- 중국 왕이 외교부장, 태평양 섬나라 8개국 방문 발표 13

3) 일본

- 한미정상회담에서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인 14
-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미일정상회담 실시 후 공동성명 발표 14
-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일본 방문 중 미국 주도의 신경제권 구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 워크(IPEF)' 발족 선언 16
- 쿼드(Quad) 4개국 정상, 일본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공동성명 발표 17

4) 러시아

- 러시아 「발트해국가 이사회」 탈퇴 18
- 러시아 정부, 외환규제 완화 조치 19
- 러시아-벨라루스 정상회담 개최 20

5) 기타

- 인도네시아, 5. 23.부터 팜유 수출 재개 21
- 태국 방콕, 9년 만에 시장 선거에서 현 총리 반대파 당선 21
- 호주 총선 결과, 앤서니 알바니즈 노동당 대표 총리 당선 22
- 멕시코시티에 '서울공원' 조성 22
- 영국 총리실 파티게이트 관련 조사보고서 발표 23
- 영국 외무장관, 중국정부의 위구르족 인권탄압 규탄 23
- 보른 프랑스 총리, 새 내각 구성 24
- 독일 연방선거관리위원장, 베를린 총 12개 선거구 중 6곳 재선거 실시 요청 26

Ⅲ. 의회 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동향

1) UN

- 제78차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개최 27

2) APEC

-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 개최 27

* 의회외교활동 현황

1) 면담

- 영국 하원 DCMS 상임위원회 대표단,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면담 28
- 다니엘 볼벤 주한스웨덴대사, 민홍철 국방위원장 면담 29
- 아키바 토르 주한이스라엘대사, 이원욱 과방위원장 면담 30
-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보좌진, 이상민 한-EU 의회외교포럼 회장 면담 31

I. 해외의회 주요 이슈

1) 미국

□ 미국 하원, 가스값 폭리 단속법 통과(LA Times/미국 입법정보시스템, 5. 19.)

- 발의자: 김 슈리어(Kim Schrier, 민주당) 하원의원
- 법안명: Consumer Fuel Price Gouging Prevention Act.(H.R.7688)
- 발의배경 및 주요내용
 - 미국 내 가솔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연일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김 슈리어(Kim Schrier, 민주당) 의원이 5. 6. 발의한 이 법안은 찬성 217: 반대 207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팽팽한 표 대결 끝에 승인되어 상원으로 넘어감. 척 슈머(Chuck Schumer) 민주당 원내 대표는 이번 법안 상정을 약속했지만 공화당의 지지 없이는 통과가 힘든 상황으로 상원에서 진통이 예상됨
 - 동 법안이 통과되면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가스 및 가정용 에너지 연료 가격을 과도하게 혹은 착취적인 방식으로 인상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되며,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에 가스값 폭리에 가담하는 회사를 처벌하고 연료 시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새로운 부서가 신설될 예정
 - 공화당과 석유업계 측은 석유는 글로벌 상품으로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동 법안에는 가스값 폭리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법안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가스값 폭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내 생산량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음. 스티브 스칼리스(Steve Scalise, 공화) 하원의원은 동 법안은 바이든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에너지와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키고 전가하기 위한 민주당의 시도라고 비난함
 -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미국의 원유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으며, 국가 전략비축기지에서 석유 방출 명령을 포함해 미국 가정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상태

□ 미국 상원, 북한 등 적국에 미군정보 판매금지 법안 발의(미국 입법정보시스템, 5. 19.)

- 발의자: 빌 캐시디(Cassidy Bill, 공화) 상원의원
- 법안명: A bill to prohibit data brokers from selling, reselling, trading, licensing, or otherwise providing for consideration lists of military servicemembers to a covered nation.(S.4281)
- 발의배경 및 주요내용
 - 발의자인 빌 캐시디(Cassidy Bill, 공화) 상원의원은 5. 19. 성명을 내고 북한을 포함한 미국의

적대국들에게 미군 병사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동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힘

- 캐시디 의원은 동 법안은 데이터 브로커(Data Broker)*가 미군 병사의 개인 정보를 집계한 목록을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적대국에 파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미군 구성원에 관한 정보를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함. 또한, 현재 미군 복무 명단과 거주지는 물론, 개인의 정치적 신념과 생활 방식에 관한 정보가 적대국에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더한다면서, 현행법은 적대국이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해 악용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데이터 브로커란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해 이를 재판매하는 개인 및 업체를 뜻함

- 한편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민주) 상원의원도 데이터 브로커의 사업 방식은 군인을 포함한 미국 시민의 안전과 개인 정보, 자유를 위협한다면서 거대 IT 기업과 데이터 브로커들이 수익을 만들기 위해 민감한 정보를 악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함

□ 미국 국방물자생산법 발동(VOA, 5. 19./백악관 홈페이지, 5. 22.)

- 분유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5. 18. 국방물자생산법(DPA, Defense Production Act)*을 발동하였으며, 동 조치를 통해 분유 생산에 속도를 낼 계획으로 알려짐.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원료 공급업체들에게 다른 그 어떤 거래 업체들보다 분유 제조사에 가장 먼저 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힘
- ※ 국방물자생산법은 전쟁 상황을 비롯한 비상사국에, 정부가 특정 업체나 업계를 지정해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법. 1950년대 한국전쟁 때 처음 도입된 이 법은 대통령 직권으로 시행하는 것이어서, 의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발효할 수 있음. 앞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前 대통령은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 사태를 비상사국으로 규정하고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해 제너럴모터스(GM) 등 자동차 업체가 인공호흡기 등을 생산하도록 명령한 바 있음
- 이번 분유 부족 사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공급망 정체 현상이 심화하면서 분유 공급에 차질을 빚기 시작했고, 지난 2월 분유 시장 점유율 1위인 애보트 사의 분유 리콜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이른바 분유 대란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됨
- ※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애보트사의 분유를 먹은 뒤 박테리아 감염으로 영유아 2명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애보트 사의 주요 분유 브랜드를 리콜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음

2) 중국

□ 중국-그리스 의회 정상 간 화상회의 개최(新華社/전인대 홈페이지, 5. 24.)

- 중국 전인대 리잔수(栗戰書) 상무위원장은 그리스 콘스탄티노스 타술라스(Konstantinos Tasoulas) 국회의장과 화상회의를 가짐
- 리 위원장은 양국 정상 간 전략적 리더십 하에 정치적 신뢰, 실질적 협력, 인적·문화적 교류 등이 발전했고 상호 핵심이익과 주요관심사를 지지하는 등 국제적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함. 또한 양국 수교5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 간 주요 공동인식을 실천하고 전면적 전략동반자관계 발전을 희망함
 - 복잡다변한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면서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공동 구축을 제의하면서 그리스 등 유관국가 간 공동 노력을 통해 중국과 유럽 간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함
 - '일대일로'와 '그리스2.0경기회복계획' 간 연계, 해운·에너지·인프라·친환경경제·디지털 경제 등 분야의 상호협력 추진을 제안하면서 중국 국제수입박람회(CIIE)에 그리스 측이 참석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양국 의회간 협력에 관하여 △상임위·친선협화·의원 간 교류 활성화 △입법·감독업무 교류 등 양국 간 실질적 협력에 법적·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 타술라스 의장은 양국 수교 50년 동안 이룬 협력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그리스 의회도 중국 전인대와의 친선교류를 기대하며, 일대일로 공동구축을 위해 경제·투자·관광 등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추진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제사회 구현을 위해 양국 의회가 적극 기여할 것을 희망함

3) 일본

□ 일본, 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하여 초당파 의원입법으로 추진된 제정법률안 성립(NHK NEWS WEB/자민당·입헌민주당 홈페이지, 5. 19.)

- 참의원에서 초당파적으로 추진된 의원발의 제정법률안 2건이 5. 19. 중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성립
 - 이번에 성립된 법률은 「장애인의 정보 취득·이용 및 의사소통에 관한 시책추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 정보접근·소통 시책추진법」)(障害者による情報の取得及び利用並びに意思疎通に係る施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및 「곤란한 문제를 안고 있는 여성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취약여성 지원법」)(困難な問題を抱える女性への支援に関する法律)임

- '장애인 정보접근·소통 시책추진법'은 초당파 의원연맹인 '장애인 정보 커뮤니케이션 추진에 관한 의원연맹'(障害児者の情報コミュニケーション推進に関する議員連盟)이 소속 의원의 의견을 모아 제정한 것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재해 등의 정보를 얻기 쉽게 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구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같은 시점에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해 실시하는 것을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함. 또한,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하여 정보를 얻기 쉽게 하기 위한 기기 및 서비스 개발·제공의 보조, 위험을 알리는 긴급 통보 구조의 정비, 장애인 상담체제의 충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취약여성 지원법'은 성폭력 및 빈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여성에 대한 기존 지원체제가 불충분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 그룹이 의견을 모아 제정한 것으로, 성범죄·가정폭력·빈곤 등 어려움이 있는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
 - 구체적으로는, 성범죄, 가정폭력, 빈곤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책무를 명기하였으며, 국가의 기본방침 책정의무 및 광역지자체의 기본계획 책정의무를 규정하였음. 또한, 민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지자체별로 '지원조정회'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여성 상담 지원센터'에서 일시적 보호, 심신 돌봄 및 자립 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함
 - ※ 일본에서는 종래 1956년 제정된 「매춘방지법」(売春防止法)에 근거하여 상담 및 보호시설 중심의 부인보호사업(婦人保護事業)을 시행하여 왔으나, 현대 여성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일본 중의원 헌법심사회, 평화헌법 제9조의 자위권의 범위에 대하여 정당별로 의견 교환(NHK NEWS WEB, 5. 19.)

- 5. 19.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는 안전보장을 주제로 각 당의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평화헌법 제9조(전쟁포기 조항)* 개정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자위대의 헌법상 근거 명기 여부 및 평화헌법상 가능한 자위권의 범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 일본 평화헌법 제9조 ①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확구(希求)하며,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이번 통상국회 회기 중에서 중의원 헌법심사회는 매주 목요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헌법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음
 - ※ 2022년 통상국회에서 중의원 헌법심사회는 2. 10. 이후 매주 목요일(3. 10. 및 5. 5. 제외) 개최되는 등 총 13회(5. 24. 현재) 개최되었는데, 최근 3년간 매년 중의원 헌법심사회가 2~4회 정도 개최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볼 수 있음(2019년 4회, 2020년 2회, 2021년 4회 개최)

- 자민당·일본유신회 및 국민민주당 등 개헌세력은 평화헌법 제9조 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보임

- 자민당의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필두간사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자민당의 개헌안이 전수방위(專守防衛) 이념 아래 방위력을 담당하는 자위대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며, 일본 헌법에 자위대의 헌법상 근거를 두더라도 자위권의 범위 및 자위대의 법적 위상은 현재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음

- ※ 일본 정부는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평화헌법 제9조에 따라 공격을 받을 때에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

- 일본유신회의 아다치 야스시(足立康史) 의원은 헌법 제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정안을 당에서 새로 결정했다고 설명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 현행 일본헌법의 문제점을 많은 국민이 깨닫게 된 지금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항목 중 하나는 헌법 제9조라고 언급하였으며, 국민민주당의 타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대표도 자위대는 '필요 최소한'의 실력조직으로 해석되어 왔지만 헌법 제9조를 개정하여 이러한 제약을 없앨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발언

- 반면, 입헌민주당·공명당 및 일본공산당은 평화헌법 제9조 개정에 대하여 신중한 입장

- 입헌민주당의 오쿠노 소이치로(奥野総一郎) 필두간사는 개헌 논의보다 우선 현재의 헌법 제9조를 갖고 일본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검토해야 하며, 자민당의 개헌안에서는 자위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

- 공명당의 키타카와 카즈오(北側 一雄) 부대표는 자위대의 명기만을 위해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최대의 실력조직인 자위대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의 바람직한 방법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및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발언하였으며, 일본공산당의 아카미네 세이켄(赤嶺政賢) 의원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편승하여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평화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외교적 노력이라고 언급

□ 일본, 호소다 중의원 의장이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야당이 해명을 요구 (The Jiji Press, 5. 22./The Mainichi Shimbun, 5. 23.)

- 일본의 주간지 슈칸분춘(週刊文春)은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중의원의장이 성희롱(セクハラ)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5. 19. 보도

- 동 주간지는 호소다 의장이 여기자에게 사생활에 대해서 묻고, 심야에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지 않겠느냐고 전화로 권유했다는 기사를 게재함

- 야당은 자민당 출신 호소다 중의원의장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민당은 이번 의혹으로 국회 운영 및 7월 참의원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음

- 이즈미 겐타(泉健太) 입헌민주당 대표는 해당 기사가 사실이라면 상당히 부적절한 것으로 호소다 의장이 스스로 의원운영위원회에서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으면 의장 불신임 결의안 제출 등을 단행할 가능성을 시사했음
- 자민당 내에서는 5. 25.부터 시작되는 추경예산 심의 및 7. 10.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참의원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 현재 일본 의회의 통상국회 회기는 6. 15.까지로 약 3주 정도 남은 상태임
- 한편, 호소다 의장은 5. 23. 성희롱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항의문을 송부하는 등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음
 - 호소다 의장은 항의문에서 슈칸분순의 기사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하였으며, 출입기자를 남녀로 구별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는 한편, 호소다 의장의 거처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인 곳으로 다른 사람을 초대할 장소도 아니라고 밝히며 강한 항의의 의사를 밝혔음
 - ※ 한편, 호소다 의장은 선거구 개편 관련 잇따른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지난 5. 12.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발언을 자제한다고 밝힌 바 있음

4) 러시아

□ 러시아 상원, 청년의원 포럼 개최(러시아 상원 홈페이지, 5. 19.)

- 러시아 상원이 주관한 제1회 청년의원 포럼이 5. 17. ~ 19. 간 모스크바에서 개최됨
 - 동 포럼은 상원이 주관해온 청년의회 1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
 - 러시아 전 지역과 15개국 대표 등 370여 명이 참석
 - ※ 해외에서는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인도네시아, 팔레스타인, 시리아, 중국 등에서 46명의 대표단이 참석(일부 온라인 참석)
- 포럼 개최 결과
 - 환경, 국제법, IT산업, 스포츠, 노동법 등 6개 분야별 토론 진행
 - 각 회의는 관련 상원의원이 주재, 관계부처 장관 및 전문가 참석
 - 토론에서 도출된 내용을 기반으로 결의안 제출
 -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경우 상원 소관 위원회와 지속 협업체계 유지

□ 러시아 하원, 철수 외국 기업에 대한 외부관리제도 도입 법안 심사(러시아 하원 홈페이지, 5. 24.)

- 5. 24. 개최된 하원 본회의에서 러시아에서 철수한 외국 기업들에 대한 외부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법률이 제1독회를 통과함
- 법안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기업 : 유럽과 미국의 반러시아 정서를 바탕으로 명백한 경제적 사유 없이 러시아 시장 철수를 결정한 기업 중 경제 안정에 영향이 미쳤을 경우(예를 들어 중요한 물품의 유일한 공급자이거나 필수품 생산 또는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한 경우 등)
 - 외부관리 기간 : 최대 18개월(1회 연장 가능)
 - 외부관리 해제 : 50% 이상 주식 소유주의 항소, 외부관리 근거 사유 해소, 회사의 청산 또는 파산시 조기 종료
 - 외부관리 지정 절차 : 관련부처 또는 지역단체장 건의→경제개발부 산하 심의위원회 심사 후 소송 제기→법원 최종 결정→VEB 개발공사 또는 기타 기관을 외부관리자로 임명
- 동 기간 동안 외국인 소유주는 러시아에서 사업을 재개하거나 주식 매각 가능함
 - 당초 동 법안은 철수 외국기업의 경우 강제 국유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었으나, 대부분 기업이 자발적 철수가 아닌 서방의 압력에 의한 결과이며, 국제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외부관리 형태로 최종 발의됨

5) 영국

□ 영국하원 윤리위원회, 의원행동강령 개정 권고(영국 의회 홈페이지, 5.24)

- 5.24. 영국하원 윤리위원회는 이해충돌 및 로비관련 규칙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행동강령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함.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2021년 오웬 파터슨(Owen Paterson) 前 보수당 의원이 당시 고문으로 등록되어있던 외부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의원권한을 남용하는 등 로비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로비스캔들이 촉발됨
 - 보수를 받고 있는 외부단체의 물질적 혜택을 위해 의회토론을 시작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또는 내각장관을 비롯한 의회구성원과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
 - 의회 및 의정활동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컨설팅 관련 직종 겸직금지
 - 의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로비나, 의회활동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한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화
 - 윤리규칙 위반으로 의회조사를 받은 이후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의회당국의 자문을 구하고 행동한 경우 윤리규칙 위반으로 징계할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항 삽입
- 매년 본회의 토론을 통해 의원행동강령을 논의 및 수정할 수 있도록 함
- 동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보고서 초안을 발표한 이후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의원행동강령 개정여부는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됨

6) 독일

□ 독일 연방의회, 월 9유로 교통권 시행을 위한 제7차 지역화법 개정법안 의결(독일 연방의회 홈페이지, 5. 19.)

- 5. 19. 독일 연방의회 제37차 본회의, 월 9유로 교통권 시행을 위한 법률안 의결
 - 3. 24. 연정위원회(Koalitionsausschuss)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독일에서 주유, 난방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였으므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지원조치를 결정하였고, 동 조치에는 △납세자 대상 300유로 에너지 보조금(Energiepreispauschale, EPP) 지급, △아동 1명당 100유로 특별보조금 지급,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대중교통요금 대폭 인하(1달 정액권 9 유로), △유류세 인하(휘발유 리터당 30센트, 디젤 리터당 14 센트)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개정안은 2022년에 지역화 기금 37억 유로를 증액해 코로나19로 인한 연방주 재정적 손실을 보상(12억 유로)하고,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월 9유로 교통권 시행(25억 유로)에 필요한 재정을 연방주에 대해 보상
 - 연방주는 연방정부에 대해 재정적자 총액을 증명해야 하고, 지역화법 제5조에 따라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지역화 자금의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독일 연방의회, 제11차 사회법전 제2권 개정법안 의결(독일 연방의회 홈페이지, 5. 19.)

- 5. 19. 독일 연방의회 제37차 본회의, 구직자 기초보장에서 수급자 의무위반행위 제재 규정 유예 결정
 - 신호등 연정은 연정협약서에서 규정한 시민수당(Bürgergeld) 도입과 함께 2019년 연방헌법재판소 결정(1 BvL 7/16)에 따라 구직자 기초보장에서 수급자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새로운 제재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고, 새롭게 도입하려는 시민수당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접촉제한 등 고용센터와 수급자 간의 새로운 협력 방식을 포함한 과학적 증거들을 반영할 예정임
 - 개정안은 새로운 법적 규율을 마련할 때까지 수급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현행 제재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유예하려는 것임
 - ※ 2019년 11월 5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으나 입법부가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면 이

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므로 엄격한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입법부의 형성의 자유는 제한된다고 결정함. 또한 현행 구직자 의무위반에 대한 모든 제재규정이 비례성 원칙을 준수한 것은 아니므로 입법부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여부와 제재 방법을 명시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때까지 현행 규정을 적용하라고 결정하였고, 동 제재 규정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적용이 중단된 상태임

□ 독일 연방의회,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재시행법안 의결
(독일 연방의회 홈페이지, 5. 19.)

- 5. 19. 독일 연방의회 제37차 본회의, 유럽연합에서 규율한 대러 제재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각 분야별로 연방과 주차원의 대응방안을 규정한 제재시행법안 의결
 -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공격에 대응해 다양한 제재 방안을 통과시켰고, 개정안은 독일에서 유럽연합 대러 제재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
 - 소유권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제한 조치(자산 동결 등)
 - 대외무역 규정의 적용 및 집행에 대한 연방주의 책임 규정
 - 효율적 제재를 위해 거래 금지 등 모든 조치를 관할하는 연방금융감독청(BaFin)에 대한 특별 권한 부여
 - 연방금융감독청(BaFin)의 투명성 등록 및 계정 조회에 대한 접속 권한을 제재 관련 당국으로 확대
 - 독일 연방은행의 제재 관련 당국에 대한 데이터 전송 권한 확대
 - 대외무역 및 지급결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를 외주업체까지 확대
 - 제재 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의무

II. 주요국 정세 브리핑

1) 미국

□ 미국 언론, 바이든 대통령 방한계기 반도체 협력 및 북한에 대한 균형적 접근 입장을 보였다고 평가(CNBC/WP/The Hill, 5. 23. ~ 25.)

- 美 언론은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5. 20. ~ 24.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면서 세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찾고 있는 공통점 중의 하나가 '반도체'임을 강조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첫 번째 정거장'이 한국의 삼성 공장'이라고 보도
 - 바이든 대통령은 '불과 몇 나노 미터 두께의 작은 칩은 우리를 인류의 기술을 차세대로 이끄는 열쇠'라고 언급했으며,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한국이 최첨단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진원지'라고 소개하며 이곳에서 한국과 미국의 경제 및 기술 동맹의 힘이 느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고 보도
 - 양 정상은 반도체와 관련하여 중국에 대한 언급은 피했지만, 투자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관심을 갖는 포인트는 공급망과 반도체에 대해 양 정상의 관심도와 언급, 중국에 대한 민감한 기술의 수출 통제 관련 분위기, 미국에 대한 투자 여부 등이었다고 보도
 - 또한 美 언론은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며 양국 모두 기술 강국이라고 강조하면서도, 2020년 현재 한일 양국의 상대적인 수출 의존도는 미국보다 중국에 치우쳐 있다고 분석. 이에 반도체를 둘러싼 지정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
 - 도쿄에 있는 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 및 공급망에 관한 공유 표준에 초점을 맞춘 계약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의 세부 사항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음
- 한편, 美 언론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입장을 보였다고 평가
 - 美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前 대통령이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를 추구한 것을 '연애 편지(Love Letter)를 통한 우호적인 관계 개선'으로 표현한 반면, 바이든 정부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진지함(Serious)'으로 표현하였는데, 진지한 경우가 아니면 북한 지도자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을 인용하면서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접근법을 취했다고 보도
 - 그러면서도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코로나19 원조를 제공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하면서 북한에 대한 '균형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

□ 미국 바이든 대통령,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군사개입 발언 파장(Reuters/백악관 홈페이지, 5. 23.)

- 5. 23. 유사시 대만 방어를 위해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미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황급히 수습에 나서는 분위기

※ 하나의 중국 정책은 1979년 미중 수교 당시 미국은 대만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도록 요구한 것을 말함. 중국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고 불법 점거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왔으며, 미국은 그동안 이를 정식으로 수용해 왔음

- 현재 5. 22 ~ 24.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일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 개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것이 미국의 약속'이라고 답변했으며,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는 데 대해 경솔하게 위험한 행동을 한다면 지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비슷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은 유사시에 미군이 대만에 개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큰 파장이 일어난 상황

- 美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직후 대통령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의 평화 안정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서둘러 해명함.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美 국방장관도 이날 우크라이나 지원국 국방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며, 대통령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약속을 반복했을 뿐이라고 해명

- 이렇게 美 백악관과 국방부가 즉각 미국의 대만 정책은 변화가 없다고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대만 측은 감사의 뜻을 밝혔지만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영토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타협과 양보의 여지는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 영토의 나눌 수 없는 일부이며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 내정에 속하는 것으로 외부의 간섭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대만해협 정세와 중미 관계에 엄중한 손해를 초래하지 말라고 경고함. 또한,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도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대만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며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제 불에 타 죽는다고 원색적으로 비난

□ 미국 바이든 대통령, 訪日 직후 텍사스 총기 참사 관련 대국민 연설(AFP/CNN/백악관 홈페이지, 5. 25.)

- 5. 25.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이날 오후 8시 40분쯤 백악관에서 연설을 갖고 총기 로비를 규탄하고 연쇄 총기 난사 사건을 종식시키겠다고 강조

- 미국 텍사스 주 우발데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이번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어린이 19명, 성인 3명 등 총 22명이 사망했으며, 목격자들과 희생자 가족의 증언에 의하면 사건 당시 수십 개의 총알이 교실 안으로 마구 날아들면서 유리창이 깨졌고, 무차별 총격에 아이들이 피를 흘리며 희생된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총격은 5. 24. 텍사스주 우발데의 롱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는데, 총격범은 샌안토니오에서 135k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18세 셀버도어 라모스(Salvador Ramos)로 확인되었으며, 사건 현장에서 경찰의 총격에 사망함

-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연설에서 국가로서 미국은 언제 총기 로비와 맞서게 될지를 질문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그러면서 2012년 26명의 목숨을 앗아간 샌디훅 초등학교 사건 등 그간 학교에서 벌어진 총기난사 사건을 상기시킨 뒤 미국인들은 이 대학살(carnage)에 대해서 행동해야 한다면서 미 의회의 총기 규제 법안 처리를 촉구함
- 또한, 그는 총기 제조업자들은 가장 많고, 가장 큰 이익을 남기는 공격용 무기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20년 동안 해 왔다면서 제발 미국인들은 해당 산업에 맞설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러한 고통을 미국의 모든 부모와 시민들을 위한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덧붙임

- 하지만 반복되는 대량 총기난사 사건에도 총기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여러 계획들이 미국 의회에서 좌초되어 각 주와 지방의회는 개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미시적인 조치만 취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향후 총기 규제 법안 처리가 될지는 미지수인 상황

□ 미국, 분유대란에 군용기를 동원하여 독일에서 특수분유 긴급공수(CNN 등, 5. 22.)

- 분유 대란을 겪고 있는 미국이 군용기까지 동원해 유럽에서 긴급 공수한 약 3만 5,000kg의 분유가 5. 22. 미 본토에 도착했다고 미 CNN이 보도
- 이번 긴급공수는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5. 18. 해외 분유 수송을 위해 군용기를 동원하라고 지시한 지 4일 만임. 이날 미 동부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 착륙한 미 공군의 C-17 수송기에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생산된 후 독일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를 거쳐 미국에 온 네슬레 분유가 담겼으며, 우유 단백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아기도 먹을 수 있는 저자극성 분유로 2만 7,000명의 영·유아가 1주일간 먹을 분량으로 알려짐
- 공항에서 직접 수송기를 맞은 톰 빌색(Tom Vilsack) 美 농무장관은 이번 분유 수송은 중대한 의료 목적을 수행했다며 특수 분유를 필요로 하는 유아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반색했으며, 이번 첫 선적 분은 일반에 판매되지 않으며 병원과 의료시설 등에 우선 공급될 예정. 브라이언 디스(Brian Deese)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NN에 이날 들어온 분유가 미국 내 특수 의료 등급 분유 수요의 15%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함

2) 중국

□ 중국, 한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해 코로나19 방역기준 완화(연합뉴스 등, 5. 19.)

- 중국 방역 당국이 5. 20.부터 한국, 미국 등 13개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힘
 - 탑승 2일 전 PCR 검사 1회 → 탑승 전 12시간 내 PCR 검사 1회 또는 탑승 전 24시간 내 PCR 검사 1회와 12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하여 음성 확인 시 입국할 수 있도록 함
 - ※ 기존 방역 절차: 중국 입국 7일 전 PCR 검사 및 자가 건강모니터링 인증절차(입국 7일 전부터 매일) → 탑승 48시간 전 PCR검사 및 항체검사 → 탑승 12시간 전 PCR 검사
 - 확진 이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지정 검사기관에서 2회의 PCR 검사(검사 간격 24시간 이상 필요) 결과가 음성인 경우 2차 PCR 검사 실시 기준 1개월 이후의 항공편 탑승 가능
 - ※ 비행기 탑승 시 일반 방역 절차(탑승 2일 전 PCR 검사 1회 → 탑승 전 12시간 내 PCR 검사 1회 또는 탑승 전 24시간 내 PCR 검사 1회와 12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1회) 준수 필요

□ 중국 왕이 외교부장, 태평양 섬나라 8개국 방문 발표(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5. 24.)

- 5. 24.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5. 26.부터 남태평양의 전략적 요충지인 솔로몬 제도와 그 주변국 등 8개국을 방문할 것이라 발표
 - 왕 부장이 5. 26. ~ 6. 4.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사모아, 피지, 통가,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등 8개국을 초청에 따라 정식 방문해 각국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각국 정부 수반을 예방하며, 피지 방문 기간 중 제2차 중국-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라 밝힘
 -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이들 국가와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양측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언급
- 왕 부장의 이번 방문은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대한 대응으로 보이며 중국의 태평양 내 외교·안보 거점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예상됨
 - ※ 중국은 솔로몬 제도 인근 키리바시, 통가, 바누아투 등과도 중국-솔로몬제도 안보협정과 유사한 협정을 맺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임
- 머네시 소가바레(Manasseh Sogavare) 솔로몬제도 총리는 왕 부장의 방문이 양국 관계의 이정표가 될 것이며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개발 파트너인 중국과 생산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언급
 - ※ 22. 4. 중국은 자국 필요에 따라 중국 함정을 솔로몬제도에 파견하고, 현지에서 물류 보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보협정을 솔로몬제도와 체결

3) 일본

□ 한미정상회담에서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인(연합뉴스, 5. 21./The Yomiuri Shimbun, 5. 22.)

- 김태호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은 5. 21. 한미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 정상이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힘
 - 김 차장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한일관계 개선을 바라는 발언이 있었느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한일이 서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 그동안 양국 관계를 불편하게 했던 걸림돌을 차차 제거해 나가기로 노력한다는 것은 미국도 알고 있고, 일본도 공감하고 한국도 그럴 것이라고 답변
 - 이어 일본도 참의원 선거가 있고, 한국도 지방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서로 지켜보면서 우선 비행기 노선부터 열고, 시민들이 관광도 오고 가는 과정에서 경제·안보적 장벽도 서서히 풀릴 것이라고 양국 정상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힘
 -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경제적·군사적으로 매우 긴밀한 한·미·일 3국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앞으로 도쿄에 가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면서 일본과의 '중개'를 자처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음
 - ※ 상원의원 시절부터 외교통으로 알려진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미·일 연계는 평생과업이라고 할 수 있음(오바마 정권의 부통령 시절이었던 2013년에 방한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양보를 강력히 요청하는 등 2015년 위안부 한일합의를 뒷받침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2017년에는 아베 총리에게도 전화해 한일합의 이행을 촉구한 바 있음)
- 한편,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는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김성한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비하여 필요하다면 한·미·일 3국 안보실장 간에도 대처 방안을 미리 협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상회담에서 한미 연합훈련은 논의되었지만 한·미·일 연합훈련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힘

□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미일정상회담 실시 후 공동성명 발표(The Jiji Press, 5. 23./The Asahi Shimbun, 5. 24.)

-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5. 23. 미일 정상회담을 실시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비난 및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미일동맹 강화 등에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짐

- **(우크라이나 정세)** 러시아의 행동을 비난하며 러시아가 잔학행위의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였으며,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일체성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러시아에 대하여 금융 제재 및 수출 관리를 포함한 제재로 대응하기로 함
 - **(유엔 안보리 개혁)** 바이든 대통령은 개혁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에 지지를 표명
 -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추진)** 인도·태평양은 세계평화, 안전 및 번영에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함
 - **(중국에 대한 국제연대 동참 촉구)** 중국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행동을 분명히 비난할 것을 촉구했으며, 중국의 핵능력 증강에 우려하며 중국에 핵 위험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여 핵군축에 기여하도록 요청하기로 함
 -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강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동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불법적인 해양권익에 관한 주장이나 위협적인 활동에 강력히 반대하였음. 또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기로 함
 -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 강조)** 안보관계를 포함한 한·미·일의 긴밀한 관계 및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을 비난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였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 해결을 위한 미국의 의지를 확인
 - **(미일동맹 강화)**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방위비의 상당한 증액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강력히 지지하였음.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안전보장조약 하에서의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차 언급하며 미일안전보장조약 제5조*가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도 적용되는 것을 확인
 - ※ 미일안보조약 제5조는 일본의 시정 아래 있는 영역에서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헌법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 양국이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는 행동을 한다고 규정
 - **(경제안보 강화)** 미일 정상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협력을 추구하기로 하고 올해 7월에 미일 양국 각료급 회담 개최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기시다 총리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에 대한 지지를 표명
 - **(비핵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해 협력할 의사를 확인했으며, 국제적인 핵 비확산·군축 체제의 초석으로서 핵무기비확산금지조약(NPT) 강화를 위한 의지를 확인
 - ※ 기시다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이 투하된 히로시마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비핵화’에 관한 관심이 높음
-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경우에 미국이 군사 개입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긍정하며 미국의 책무라고 답변하여 중국 정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 미국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직후 미국의 대만 정책에 변경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중국 외교부 당국자는 대만문제는 중국의 내정문제로 외부세력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즉각 반발했음

□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일본 방문 중 미국 주도의 신경경제권 구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발족 선언(The Asahi Shimbun/NIKKEI, 5. 24.)**

- 방일 중인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5. 23. 도쿄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의 신경경제권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를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등 13개국으로 발족시키겠다고 선언
 -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리더십을 확대하기 위해 IPEF를 통해 동맹국·우방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규범 수립 및 중요물자의 공급망 강화 등을 연계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분석
 - IPEF 참가국은 미국,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3개국이며, 대만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IPEF 협의 분야는 ①무역, ②공급망, ③인프라·탈탄소, ④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로 구성하며, 각 가맹국은 분야별로 참여하게 됨
 - 다만, 미국의 바이든 정권은 IPEF에 관세 협상을 포함하지 않고 의회의 승인을 불필요하게 하였는데, 의회의 승인에 근거하는 무역 협정은 아니기 때문에 정권 교체에 따른 변동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다소 불안감은 남아있는 상황
 - ※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前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에서의 이탈을 결정하면서 5년에 걸쳐 아시아권 내 경제전략이 없었으며, 관세 인하를 포함한 무역협정은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미국 여야 모두 반대하고 있어 미국의 TPP 복귀는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짐
-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5. 23. IPEF의 발족을 도쿄에서 선언하는 배경에는 미국과 일본이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여 참가국 확대로 연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알려짐
 - 일본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및 지역적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등 대형 자유무역협정(FTA)에 아시아 국가들과 결속을 강화한 경험을 토대로 IPEF 참가국 모집을 위해 미국을 측면 지원하고 있으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IPEF에 참가해 협력하겠다고 언급
 -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FTA를 말함

□ **쿼드(Quad) 4개국 정상, 일본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공동성명 발표(The Jiji Press/NIKKEI, 5. 24.)**

-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쿼드(Quad) 4개국 정상들은 5. 24. 일본 총리관저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함
 - 쿼드는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민주주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우방국들이 중국의 패권주의적 행동을 공동으로 견제하는 억제하려는 의도에서 조직되었으며, 이번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Joe Biden)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 및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신임 호주 총리가 출석했음
 - ※ 쿼드 정상회의는 대면으로는 2021. 9. 미국 워싱턴 D.C.에서 회의를 개최한 후 두 번째, 온라인 형식을 포함하면 네 번째였음(다음 회의는 2023년 호주에서 개최할 예정)
- 쿼드 4개국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겨냥하여 '힘에 의한 현상 변경행위'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 기시다 일본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유엔헌장의 제원칙(諸原則)에 대한 도전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였으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의 참석국들은 인도·태평양의 강대국이며 공통의 가치관과 비전을 위해 일어설 것이라고 발언
 - 모디 인도 총리는 쿼드의 결의와 상호신뢰에 뒷받침된 활동은 민주주의 세력의 큰 힘이 된다고 발언하였으며, 5. 23. 정권교체 후 바로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한 알바니즈 호주 총리는 정권교체* 후에도 호주의 쿼드 참여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 2022년 호주 연방 선거에서 알바니즈 노동당 대표가 약 9년 만에 여야 정권교체를 이루며 자유당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의 재선 도전을 꺾고 호주의 새 지도자가 되었음
- 이번 공동성명은 과거 쿼드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에는 없던 '안전보장에 특화된 장(章)'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며, 기시다 일본 총리는 4개국 정상이 일치하여 발표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
 - 공동성명에서는 중국의 해양 진출이 활발한 동·남중국해에 대해 '규범에 근거한 해양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항한다'고 강조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해양감시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 어선 등 연안 경비에 관한 정보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 공유한다는 구상을 제시하였음
 - ※ 남·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베트남 및 필리핀 등과의 연계도 상정하고 있으며, 현재 동·남중국해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불법 조업은 중국 선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파악되고 있음
 - 또한,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하여 군사기지화하고 있는 난사군도(南沙群島·베트남명 썬영사군도) 등을 떠올리게 하는 분쟁지역의 군사화를 비판하는 표현도 있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유엔 안보이사회 결의에 따라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음

- 다만, 인도의 입장을 배려하여 이번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직접적으로 지칭한 비판은 보류함. 인도는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유대관계가 깊으며 중국과는 국경문제가 있어 중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일본이 제안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이라는 문구는 성명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한편, 미국과 일본은 중장기적으로 인도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경제안보 및 우주 분야 등 경제 분야의 성과도 중시하는 분위기. 경제안보와 관련하여 5G 및 반도체 공급망 구축 연계를 확인했으며 사이버 보안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력 및 통신 등 중요 인프라 보호에 협력한다는 구상을 밝힘. 또한, 우주 분야와 관련하여 4개국의 위성정보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제공해 해양자원 개발과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을 주겠다고 합의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 인프라 구축에 5년간 500억 달러(약 63조 원) 이상의 지원을 약속

4) 러시아

□ 러시아 「발트해국가 이사회」 탈퇴(러시아 외교부, 5. 17.)

- 5. 17.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발트해국가이사회(CBSS) 탈퇴를 발표함

※ 발트해국가이사회

- 발트해 주변국가간 지역협의체로 환경, 에너지, 안보, 교육문화, 인권 등에 대해 협의
- 1992년 창설, 러시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스웨덴과 EU로 구성

- 외교부 성명 내용

- CBSS 내 NATO, EU 회원국들은 평등한 대화와 발트해 역내 질서를 형성하였던 원칙들을 거부하였으며, 일관되게 CBSS 조직을 러시아어 정책 도구로 전환시키고 있음. 러시아는 CBSS의 업무와 프로젝트 참여가 배제되었으며, CBSS 내에서 벨라루스의 옹호자 자격은 정지됨
- 러시아는 발트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여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서방국가들은 기회주의적인 목적을 위해 CBSS를 독점하고, 러시아의 이익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CBSS의 업무를 구성하고 있음. 역외 문제들이 발트해로 투사되고 있고, 완전한 협력을 지속하는데 관심 있는 국가들에게 압력이 가해지며, 지난 몇 년간의 성과와 역내 안정이 훼손되고 있음
- 2022. 5. 25. 노르웨이 크리스티안산에서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CBSS의 장관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음. CBSS는 제재를 거론하며 러시아에게 기여금을 돌려주려고 하지 않아 사실상 CBSS 예산에 대한 러시아의 기여금은 도난당한 것임
- 현 상황에서 CBSS의 활동이 정상화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음. 우리는 러시아가 CBSS에 잔류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함. 러시아는 기구를 파괴적 활동과 서구 나르시시즘을 위한 무대로 바꾸는데 참여하지 않을 것임

- 적대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라브로프(Сергей Лавров) 외교장관은 CBSS 회원국 장관과 EU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및 CBSS 사무국에 러시아의 CBSS 탈퇴를 알리는 서한을 발송하였음. 동시에 러시아 상원은 CBSS 탈퇴 결정을 승인함
- CBSS 탈퇴는 러시아의 역내 위치에 영향을 주지 않음. 러시아는 책임있는 파트너국들과 일할 것이고, 공동의 유산인 발트해 지역의 발전과 관련한 행사들을 개최할 것이며, 러시아 동포들의 이익을 보호할 것임
 - ※ 러시아가 유럽 내 국가간 협의체에서 탈퇴한 것은 지난 3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탈퇴에 이은 2번째 사례임

□ 러시아 정부, 외환규제 완화 조치(러시아 재무부, 5. 19.)

- 5. 19. 러시아 정부는 최근 외환규제 추가 완화 조치를 발표함
- 외화 현금 매매 완화
 - 5. 20.부터 은행이 보유한 외화 중 달러화·유로화를 제외한 외화 현금에 대해서는 은행이 동 외화 현금을 매입한 시점 등의 제한 없이 개인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함
 - ※ 러시아 중앙은행은 임시조치를 통해 금년 3. 9. ~ 9. 9.까지 시중 은행의 개인에 대한 외화 현금매도를 금지(3. 9. 공표)하였으나, 은행이 4. 9. 이후 현금 창구를 통해 매입해 온 외화 현금분에 한해 4. 18.부터 개인에 대한 매도를 허용한 바 있음(4. 8. 공표)
 - 달러 및 유로화는 기존과 동일하게 시중 은행이 4. 9. 이후 현금 창구를 통해 매입한 달러 및 유로화 현금 보유분 범위 내에서만 개인에 대한 매도가 가능(금년 9. 9.까지 적용)
- 외화 의무 매각 완화
 - 수출업자가 수입 거래를 병행하며 수출입 결제 계좌를 개설한 은행이 동일한 은행인 경우에는 수출로 획득한 외화에서 향후 지불할 수입 대금을 제외한 범위에서 외화 의무 매각
 - ※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수출업자들이 무역거래로 획득한 외화의 80%를 획득 후 3일 이내에 매각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음.(2. 28. 공표)
- 최근 외환규제 완화 조치 주요 공표 내역
 - 4. 1. 개인 해외송금 제한 완화 : 월 1만 달러 이내
 - 4. 1. 비거주자에 대한 선금 지급 한도(총 계약금액의 30%) 예외 범위 확대
 - 4. 8. 개인의 외화 예금 인출 완화 : 유로화로도 인출 허용
 - 4. 8. 은행의 개인 대상 외화 현금 매도 허용
 - 4. 19. 수출업자 외화 의무 매각 기간 연장 : 자원 및 에너지 분야 이외
 - 4. 21. 수출업자 외화 의무 매각 기간 연장 대상 확대 : 전체 수출업자로 확대
 - 5. 5. 수출업자 외화 의무 매각 대금 완화 : 수입 대금 제외
 - 5. 16. 개인 해외송금 제한 완화 확대 : 월 5만 달러 및(또는) 근로소득 실수령액
 - 5. 19. 은행의 개인 대상 외화 현금 매도 허용 확대

□ 러시아-벨라루스 정상회담 개최(러시아 대통령실, 5. 23.)

- 5. 23. 푸틴(Владимир Путин) 러시아 대통령과 루카셴코(Александр Лукашенко) 벨라루스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소치에서 개최됨
 - 회담은 약 5시간 동안 진행, 두 정상의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 진행
 - 공식회담 이후 비공식 환담 지속, 회담결과 공동 기자회견 미개최
 - 이번 정상회담은 5. 16. CSTO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시 정상간 합의에 따라 개최
- 양 정상은 금번 회담을 통해 수입대체(경제·안보분야 포괄) 및 경제협력 강화, 우크라이나 현황 및 NATO 접경지역 군사력 증대 등을 집중 논의함
 - 푸틴 대통령은 양국이 함께 서방제재를 잘 극복해 내고 있다며, 지역안보 및 양자 안보사안, 경제협력 문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고 언급
 - 루카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양국에게 오히려 기회의 시간이 될 것이며, 경제 및 안보분야에서 양국이 더욱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 양 정상 모두 발언 요지

〈푸틴 대통령〉

- 5. 16. 이후 추가 회담 개최 이유는 역내 및 양국 안보 문제를 비롯해 경제와도 관련된 진지하고 심도있는 대화가 필요하였기 때문임
- 어려운 상황에도 러시아 경제는 견고하게 제재 상황을 버티고 있음
- 현재 파트너국들과의 교역 결재를 루블화 결재로 전환 중임. 벨라루스와는 오래전부터 루블화 결재를 논의해 왔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
- 산업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에너지, 농업 등 경제 전반에서 여러 공동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며, 우리의 합의대로 모든 것이 침착하게 이행되고 있음
- 러-벨 연합국 통합을 위한 모든 노력이 양국 경제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단단한 기반이 될 것

〈루카셴코 대통령〉

- 제재 압력 속에서 양국 연합 경제는 오히려 굳건해짐. 예상보다 낮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이를 방증함
- 양국 정상의 지시에 따라 수입대체를 위한 구체적 방향성이 수립되고 있음. 안보 분야에서는 연합국 군대에 필요한 물품 생산 협력이 진행 중임
- 우리는 거대 시장과 자원,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서방은 우리로 하여금 자국 경제 발전에 더욱 집중하도록 함
- 나토는 여전히 서부국경에 군대를 집중 배치하고 있음. 폴란드와 나토는 도움을 빙자하여 1939년 이전처럼 우크라이나 서부지역을 분할하려고 하는바, 대단히 우려스러움

- 우크라이나 방면으로부터 서부 또는 어느 쪽도 불시에 공격당하는 것을 허용치 않을 것이며, 안보에 있어 벨라루스는 러시아를 지지함

5) 기타

□ 인도네시아, 5. 23.부터 팜유 수출 재개(Reuters, 5. 20.)

- 5. 19.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팜유원유와 관련 상품에 대한 수출 금지령을 5. 23.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함. 이번 조치는 4. 28. 인도네시아 정부가 식용유 대란을 이유로 팜유 등 수출을 전격 중단한 지 25일 만임
 - 조코위 대통령은 대용량 식용유 가격이 정부 목표 가격인 리터당 14,000 루피아(1,216원)까지 내려가지 않았지만, 1,700만 명에 이르는 팜유 산업 종사자들의 현 상황을 고려해 수출 금지령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함
 - ※ 수출 금지령 이후 식용유 가격은 리터당 19,800 루피아(약 1,720원)에서 17,600 루피아(약 1,529원)으로 떨어짐
 - 인도네시아 정부는 팜유 수출 금지로 인해 수입이 끊긴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무역수지 흑자 폭 감소가 우려되자 이번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식용유 내수 물량 1천만 톤을 유지하기 위해 내수시장 공급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식용유 업체에 각각 부과할 내수시장용 할당량을 산정 중임

□ 태국 방콕, 9년 만에 시장 선거에서 현 총리 반대파 당선(Bangkok Post, 5. 23.)

- 5. 22. 태국 수도 방콕에서 9년 만에 치러진 시장 선거에서 브라우트 찰오차(Prayuth Chan-ocha) 태국 총리의 반대파 인사인 찻차 싯티판(Chadchart Sittipunt) 前 태국 교통부 장관이 당선됨
 - ※ 2013. 3. 방콕 시장 선거에서 당선됐던 수쿰판 빠리밋 前 방콕 시장이 2016. 8. 브라우트 총리에 의해 부패 및 비위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브라우트 총리는 경찰 출신인 아스원 완무앙 부시장을 시장 자리에 임명함. 따라서, 방콕 시장 선거는 2013. 3. 이후 9년 만에 치러진 것임
 - 선거관리위원회의 비공식 집계 결과 찻차 前 장관의 득표 수는 130만 표에 달했으며, 다른 경쟁 후보 2인은 각각 25만 표 정도 득표함. 이번 선거에서는 총 31명이 시장직에 도전했으며, 유권자 수는 440만 명, 투표율은 64%로 집계됨
- 찻차 前 장관은 당선이 확정되자 이번 승리는 민주적인 절차의 힘을 보여준 것이며, 앞으로 정치적 견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 ※ 찻차 前 장관은 잉락 친나왓 前 총리 집권시기(2011년~2014년)에 교통부 장관을 지냈으나, 2014년 브라우트 당시 육군 최고사령관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축출됨
- 태국 쉐라롱군대의 티티난 풍수디락 교수는 찻차 前 장관의 압승은 브라우트 정권 및 군부 세력의 부족한 기량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 표시라는 의견을 표함

□ 호주 총선 결과, 앤서니 알바니즈 노동당 대표 총리 당선(AP/Reuters, 5. 24.)

- 5. 21. 실시된 호주 총선에서 노동당이 다수당을 확정하고,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노동당 대표가 호주 총리로 당선됨
 - 5. 24. 기준 개표 약 74% 진행된 상황에서 하원의석 150석 중 노동당 75석, 자유당·국민당 연정 14석, 기타 15석 확보된 상황
 - ※ 호주의 선거제는 소선거구제와 과반수득표제, 우선순위투표제를 절충한 형태로 최종의석이 확정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림
 - 다만, 노동당이 단독정부 구성요건인 76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군소정당 또는 무소속 의원들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여야 함
- 총선의 주요 쟁점이 되었던 코로나19 상황 이후의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등 호주의 경제상황 및 급격한 기후 변화 등에 대하여 노동당은 기후변화에 대한 강력한 조치, 아동·노인 돌봄 지출 상향조정, 저임금 노동자 임금 인상 지원, 제조업 활성화, 신규 주택 구매 시 가격의 최대 40% 정부 보조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알바니즈 총리는 호주 최초의 비(非) 앵글로-켈틱계 총리로 5. 23. 호주의 제31대 총리로 공식 취임하여 새 정부의 구성으로, 리처드 말스(Richard Marles) 부총리, 페니 웡(Penny Wong) 외교부장관, 짐 찰머스(Jim Charlmes) 재무부장관과 케이티 갤러거(Katy Gallagher) 재정부장관 등을 새로 임명함

□ 멕시코시티에 ‘서울공원’ 조성(연합뉴스/주멕시코한국대사관, 5. 23.)

- 5. 23.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멕시코시티 시 정부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콰우테모크 구(區)에 ‘서울공원(Plaza Seoul)’을 조성하는 안건을 가결
 - 공원이 들어설 부지는 차폴테펙대로 옆 가로 60m, 세로 10m가량의 직사각형 모양의 부지로, 멕시코시티 내 한인 상점들이 모여있는 소나로사(Zona Rosa) 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멕시코시티 주요 대중교통인 메트로버스역 옆에 위치해 유동 인구도 많은 편으로 알려짐
 - 이번 공원 조성은 올해 한국·멕시코 수교 60주년과 서울·멕시코시티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이뤄지는 것임. 작년부터 이를 추진해온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은 멕시코시티 도시계획 위원들에게 양국 관계의 중요성과 2017년 멕시코 대지진 등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등을 강조하며 만장일치 찬성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짐
 - 라파엘 그레고리오 고메스(Rafael Gregorio Gomez) 멕시코시티 도시개발청장은 서울공원 조성을 계기로 양국 문화·인적교류가 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으며, 서정인 주멕시코 대사도 1968년 차폴테펙 공원에 설치된 한국정, 2011년 독립 200주년 공원에 설치된 성덕대왕신종에 이어 서울공원이 멕시코시티 내에 한·멕시코 우정을 상징하는 또 다른 명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함

□ 영국 총리실 파티게이트 관련 조사보고서 발표(Sky News, 5. 25.)

- 5. 25. 총리실 파티게이트 조사를 담당한 수 그레이(Sue Gray) 내각부 고위공무원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이 많이 발생’하였다며, 총리실 지도부에서 직장문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발표
 - ※ 그레이 담당관은 지난해 파티게이트가 최초로 보고된 이후 총리실 내 방역규칙 위반사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런던광역경찰청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보고서 발표가 연기됨. 한편, 지난 주 종결된 런던광역경찰청의 조사 결과, 총리를 포함한 총리실 직원 83명에 대해 총 126건의 벌금이 부과됨
- 그레이 보고서는 2020~2021년 사이 발생한 총 16건의 방역규칙 위반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발표
 - 총리실 직원의 대다수가 코로나19 방역규칙을 위반하고 파티에 참석한 적 있음
 - 지도부에서 파티를 주최하거나 참석해 부하직원들도 의심 없이 참석하는 분위기 형성
 - 과도한 음주 및 그로 인한 소란이 빈번히 발생
 - 직원들이 쉽게 우려를 제기할 수 없는 경직된 직장 분위기
 - 공보수석이 파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으나 파티강행
 - 청소 및 보안직원에 대한 갑질 및 무시
-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총리는 하원 본회의에서 출석해, 본인의 감독 하에 발생한 일들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느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많은 점을 배웠다고 발표
 - 존슨 총리는 ‘의도적으로 의회를 기만’해 장관행동강령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하원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내각 장관이 장관행동강령을 위반하는 경우 사퇴로 이어짐
-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야당대표는 총리실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총리가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
 - ※ 스타머 대표 역시 지난해 방역규칙을 위반하고 예비내각 인사들과 회식을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현재 런던광역경찰청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벌금형을 받을 경우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영국 외무장관, 중국정부의 위구르족 인권탄압 규탄(Guardian, 5. 24.)

- 5.24. 리즈 트러스(Liz Truss) 영국 외무장관은 중국정부의 신장지역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해당 지역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미셸 바체렛(Michelle Bachelet) UN 인권고등판무관의 제한 없는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
 - BBC는 2018년 신장지역의 중국경찰 컴퓨터에서 해킹된 각종 사진과 자료를 공개하고, 중국 정부가 강제수용소를 탈출하는 위구르족을 총살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함
- 누스랏 가니(Nusrat Ghani) 보수당 의원은 해당 보도를 토대로 중국정부의 위구르족 인권탄압에 대한 의회 긴급질의를 상정함

- 정저광(Zheng Zeghang) 주영중국대사는 BBC가 조작된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며, 신장지역에 대한 루머를 조장한다고 비판

□ **보른 프랑스 총리, 새 내각 구성(프랑스 정부 공식 홈페이지, 5. 20.)**

- 알렉시 콜레(Alexis Kohler) 대통령실 실장은 5. 20. 엘리자베트 보른(Elisabeth Borne) 총리의 제청에 따라 에마누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내각 구성을 발표함
 - 2024년 파리 하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체육, 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부를 신설하여 정부 부처는 기존 16개에서 17개로 늘어났으며, 기존 부처의 기능도 일부 재조정됨

카스테스 내각(20.7.6-22.5.16)		보른 내각(22.5.20 이후)	
부서명	장관	부서명	장관
내무부 Ministère de l'Intérieur	Gérald Darmanin	내무부 Ministère de l'Intérieur	Gérald Darmanin
생태전환연대부 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et solidaire	Barbara Pompili	생태전환국토통합부 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et de la Cohésion des territoires	Amélie de Montchalin
국토통합 지자체부 Ministère de la Cohésion des territoires et des Relations avec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Jacqueline Gourault	에너지전환부 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nergétique	Agnès Pannier-Runacher
법무부 Ministère de la Justice	Eric Dupond-Moretti	법무부 Ministère de la Justice	Eric Dupond-Moretti
국방부 Ministère des Armées	Florence Parly	국방부 Ministère des Armées	Sébastien Lecornu
유럽외교부 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Jean-Yves Le Drian	유럽외교부 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Catherine Colonna
해외영토부 Ministère des Outre-Mers	Sébastien Lecornu	해외영토부 Ministère des Outre-Mers	Yaël Braun-Pivet
보건연대부 Ministère des Solidarités et de la	Olivier Véran	보건예방부 Ministère de la Santé et de la Prévention	Brigitte Bourguignon

Santé		연대·자활·장애인부 Ministère des Solidarités, de l'Autonomie et des Personnes handicapées	Damien Abad
경제재정부총부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relance	Bruno Le Maire	경제재정디지털주권부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Souveraineté numérique	Bruno Le Maire
노동고용부 Ministère du Travail, de l'Emploi et de l'Insertion	Élisabeth Borne	노동완전고용부 Ministère du Travail, du Plein-emploi et de l'Insertion	Olivier Dussopt
교육청소년체육부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a jeunesse, des sports	Jean-Michel Blanquer	교육청소년체육부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e la jeunesse	Pap Ndiaye
		체육·올림픽·패럴림픽부 Ministère des Sports et des Jeux olympiques et Paralympiques	Amélie Oudéa-Castéra
농림식품부 Ministère de l'Agriculture et de l'Alimentation	Julien Denormandie	농림식량주권부 Ministère de l'Agriculture et de la Souveraineté alimentaire	Marc Fesneau
혁신행정부 Ministère de la transformation et de la fonction publique	Amélie de Montchalin	혁신행정부 Ministère de la transformation et de la fonction publique	Stanislas Guerini
고등교육연구혁신부 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de la Recherche, et de l'Innovation	Frédérique Vidal	고등교육연구부 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Sylvie Retailleau
문화부 de la Culture	Roselyne Bachelot	문화부 de la Culture	Rima Abdul-Malak
해양부 Ministère de la Mer	Annick Girardin		

□ 독일 연방선거관리위원장, 베를린 총 12개 선거구 중 6곳 재선거 실시 요청 (Spiegel, 5. 24.)

- 5. 24. 게오르크 티(Georg Thiel) 연방선거관리위원장은 연방의회 선거감독위원회에 출석하여 2021년 연방의회 총선 시 베를린 지역 선거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재선거 필요성 표명

- 2021. 9. 26. 연방의회 총선 시 베를린에서 △투표용지 누락/가짜투표용지 등으로 투표소 일정 시간 폐쇄, △베를린 마라톤으로 다수의 도로가 차단됨에 따른 투표 방해, △다수의 투표 동시 진행(연방의회 총선, 베를린 주의회 선거, 국민청원 투표)으로 인한 장시간 투표대기로 인한 투표 포기 등 문제점 발생
- 연방의회 선거감독위원회는 베를린 총 12개 선거구 중 6곳*에 대한 재선거 실시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연방의회 본회의에서 재선거 여부를 표결해 결정할 예정

*재선거 실시 요구 선거구(6곳): 베를린 선거구 75(Mitte), 76(Pankow), 77(Reinickendorf), 79(Steglitz-Zehlendorf), 80(Charlottenburg-Wilmersdorf), 83(Friedrichshain-Kreuzberg - Prenzlauer Berg Ost)

III. 의회 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동향

1) UN

□ 제78차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개최(외교부 보도자료, 5. 23.)

- “아태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진전을 위한 공동 의제”를 주제로 제78차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를 태국 방콕에서 하이브리드로 개최(5. 23. ~ 5. 27.)

*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 UN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5개 지역위원회 중 하나로 1947년에 아태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

- 주요 논의사항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역내 협력 방안
 -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아태지역 내 주요 현안
-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은 대한민국 대표로 화상 참석하여 코로나19 팬데믹 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아태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역내 포용적 디지털 기술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아태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역내 협력에 계속 기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언

2) APEC

□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 개최(외교부 보도자료, 5. 19.)

- 아태지역 무역 원활화, 안전한 국경이동 재개 방안 및 녹색경제 등 올해 APEC 중점 협력사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를 태국 방콕에서 대면으로 개최(5. 18. ~ 5. 19.)

※ 주요 참석자 :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등 APEC 회원국 고위관리

- 주요 논의사항
 - 역내 자유무역 확대
 - 다자무역체제 기능 회복
 - 역내 서비스 경쟁력 강화
 - 국경 간 이동 재개를 위한 협력 방안
- 윤성덕 경제외교조정관은 대한민국이 경제통합, 안전한 국경 간 이동 등 올해 APEC의 주요 논의 사항과 관련 협력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대한민국이 2012년부터 실시해온 개도국 협상역량강화사업(CBNI)*을 계속 추진 예정임을 소개하고, APEC 회원국들의 건설적 참여를 당부

* 개도국 협상역량강화사업(CBNI,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 개도국의 FTA 분야별 협상능력 제고를 위해 대한민국 주도로 시행중인 사업

* 의회외교활동 현황

1) 면담

□ 영국 하원 DCMS 상임위원회 대표단,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면담(5. 23.)



- 일시 및 장소 : 5. 23.(월) 14: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회의실
- 참석자
 - 우리 측 :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승수 간사, 김예지 위원
 - 상대 측 : 영국 하원 DCMS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대표단 8인
 - 면담 경위 : House of Commons DCMS(Digital, Culture, Media & Sport) Committee 대표단 요청
- 주요 면담 내용
 - 이채익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양국 교류가 줄어든 시점에서 이번 영국 대표단의 방한이 매우 시의적절하다 평가함. 김승수 간사는 오늘의 면담이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한국의 한류가 문화 시장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영국은 디지털 분야를 선도하고 있음을 밝히고, 김예지 의원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영국의 문화를 현장에서 배우고 싶다며 소회를 밝힘
 - 영국 대표단은 한국의 문화적 성장 배경을 조사하고 해외 마케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방한을 기획하였으며, 문화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는 방식에 감명했음을 밝힘. 이번 면담이 영국-한국 간 파트너십과 교역관 관련된 합의를 발전시킬 계기가 되기를 기원함

□ 다니엘 볼벤 주한스웨덴대사, 민홍철 국방위원장 면담(5. 24.)



- 일시 및 장소 : 5. 24.(화) 13:00, 국방위원장실
- 면담 경위 : 한-스웨덴 관계 강화 및 국방 협력 관련 논의
- 참석자
 - 우리 측 : 민홍철 국방위원장
 - 상대 측 : 다니엘 볼벤(Daniel Wolvén) 주한스웨덴대사
- 주요 면담 내용
 -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다니엘 볼벤 주한스웨덴대사와의 첫 만남으로 매우 반가운 마음을 전하며, 6.25전쟁 의료지원단 파견 등 과거부터 특별한 인연을 이어온 양국이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이어가기를 희망
 - 다니엘 볼벤 대사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위기가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스웨덴은 오랜 비동맹주의를 깨고 핀란드와 함께 NATO 가입을 결정하였다고 언급
 -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한국은 NATO의 글로벌 파트너 국가로서 NATO내 스웨덴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스웨덴과 한국이 각자 뛰어난 방위산업 기술을 보유한 만큼 서로 협력할 경우 양국의 국익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
 - 다니엘 볼벤 대사는 국방산업은 최첨단 기술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만큼 양국의 국방협력은 과학기술의 협력으로 심화될 여지가 크다고 언급하며, 의회협력에 있어서도 올 가을 스웨덴 총선 후 새로 구성될 의회와 우리 국회의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기대

□ 아키바 토르 주한이스라엘대사, 이원욱 과방위원장 면담(5. 24.)



- 일시 및 장소 : 5. 24.(화) 15:30, 과방위원장실
- 면담 경위 : 이스라엘과 과학기술 분야 의회 외교 기반 구축 방안 논의
- 주요 면담 내용
 - 이원욱 위원장은 이스라엘은 중동 내 유일한 민주국가이자, 여러 아랍국가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독보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다며 동북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북한에 둘러싸여있는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언급함. 양국 모두 작지만 강한 나라로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국토가 척박하여 인적자원 개발에 주력한 양국은 서로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강조함
 - 아키바 토르 대사는 이스라엘은 안보 위협 속에서 우수한 인적·지식자원을 활용한 ‘창업국가 (Start-up nation)’ 패러다임을 통해 건국 60년간 50배의 경제성장을 달성했다며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과 기초과학 및 하이테크 분야에서 더 많은 교류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또한 토르 대사는 한-이스라엘 FTA가 작년에 정부 간 서명이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의회 (크네셋)의 비준도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 국회 비준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빠른 비준을 요청함

□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보좌진, 이상민 한-EU 의회외교포럼 회장 면담(5. 25.)



- 일시 및 장소 : 5. 25.(수) 15:00, 이상민 의원실
- 참석자
 - 우리측 : 이상민 한-EU 의회외교포럼 회장
 - 상대측 : 카롤린느 파르세(Caroline Parsché) 보좌관(루카스 만들 DKOR회장)
 루시아 마르티네즈 마로토(Lucía Martínez Maroto) 보좌관(수자나 솔리스 DKOR 부회장)
 스테파니아 가지나(Stefania Gazzina) 유럽의회사무국 한국담당관
- 면담 경위 : 주벨기에한국대사관 개최 유럽의회 보좌관 방한초청사업 계기 면담 요청
- 주요 면담 내용
 - 이상민 한-EU 의회외교포럼 회장은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보좌진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며, 빈부격차 등 사회문제에 있어 EU의 모범적 연대를 평가함. 또한 핵융합에너지연구 등 EU의 주요 사업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언급함. 차별금지법 및 사형제 폐지 입법 등 EU에서 관심이 많은 사안에 있어서 EU측과의 공감대를 확인함
 - 루시아 마르티네즈 마르토 보좌관은 기후변화 등 문제에 있어서 한-EU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화답하고, 여타 주요 분야에서 EU의 협력 의지를 강조함
 - 스테파니아 가지나 한국담당관은 차별금지법 등 문제를 EU에서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화답하고, 한반도관계대표단 방한 및 우크라이나 관련 화상회담 추진 진행 의지를 확인함
 - 카롤린느 파르세 보좌관은 한국의 지정학적 문제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유럽의 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문제에 대하여 언급함